

2018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 g r i f o o d F i s c a l R e p o r t

논단
재정사업 현안진단
재정사업 심층평가
농식품 재정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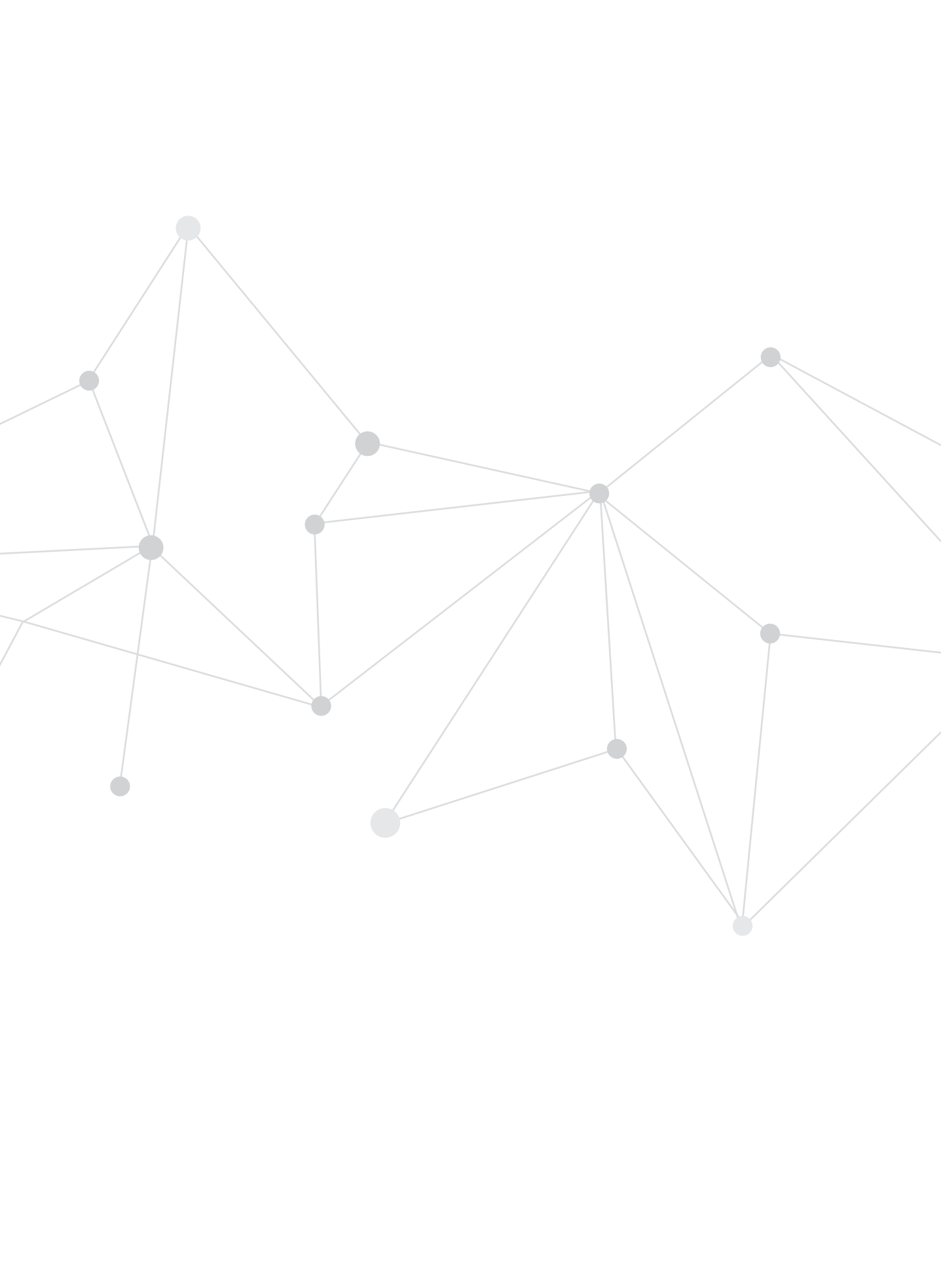
경제 동향
경제 전망
2019 농식품 예산 현황
부록



2018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 g r i f o o d F i s c a l R e p o r t



| CONTENTS |

01 **논단**

06 지방분권과 농업·농촌 재정지출 조정의 과제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12 농촌형 교통모델

03 **재정사업 심층평가**

26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04 **농식품 재정이슈**

36 직불제, 농업의 역할 변화를 견인하는 정책 수단

05 **경제 동향**

42 경제 동향

06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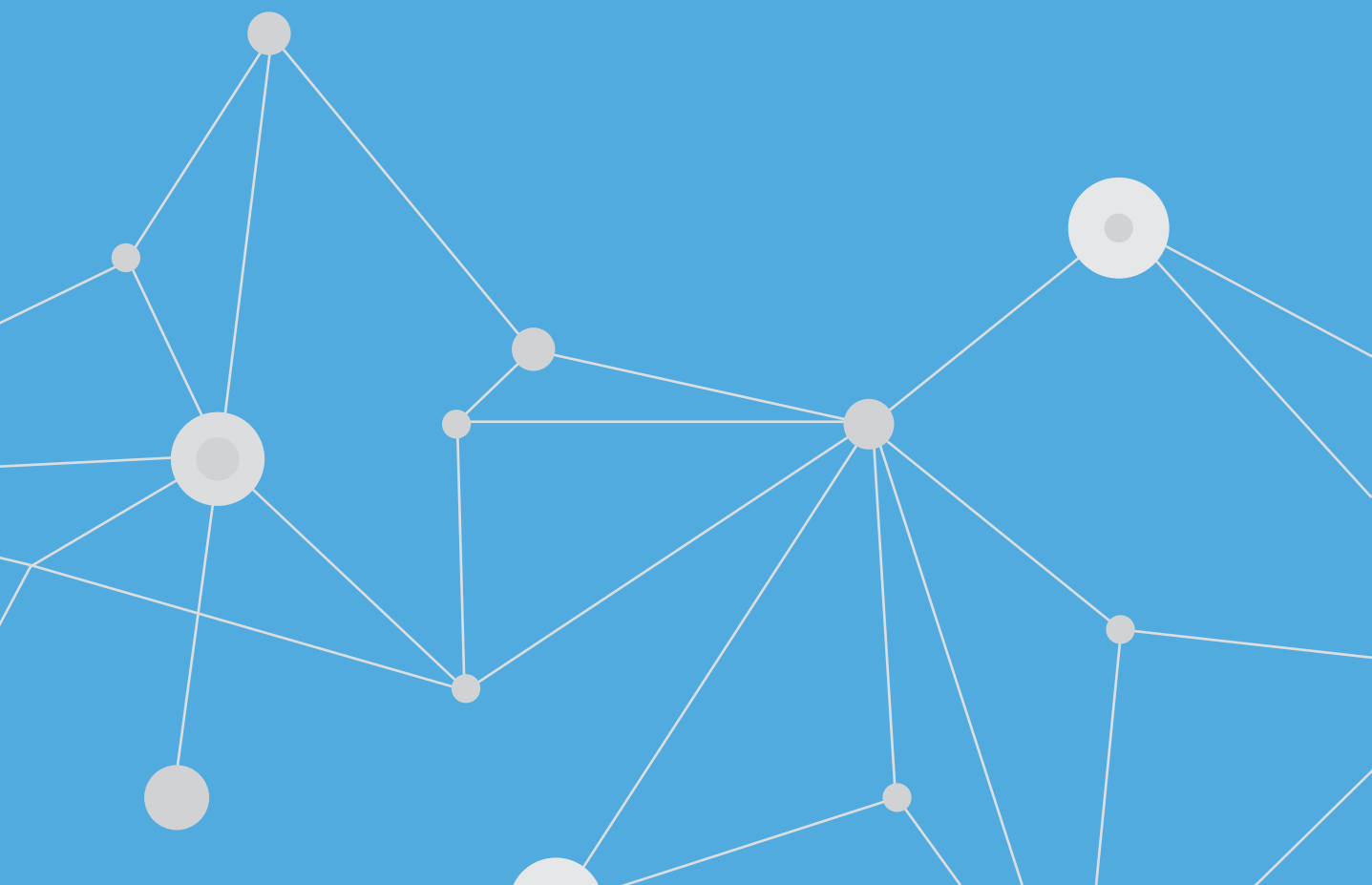
58 경제 전망

07 **2019 농식품 예산 현황**

72 2019 농식품 예산 현황

08 **부록**

92 2019년도 농식품부 사업부문 분류표



01 **논단**

지방분권과 농업·농촌 재정지출
조정의 과제

01 **논단**

지방분권과 농업·농촌 재정지출 조정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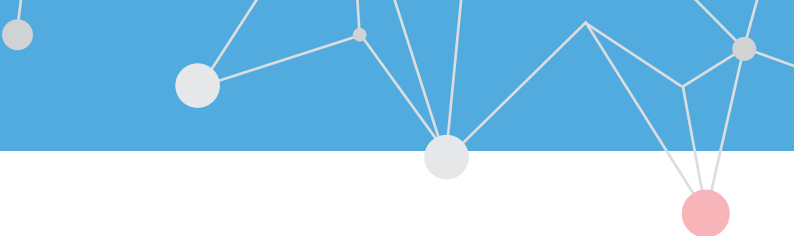


● 농정에서 지방분권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농정은 중앙정부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 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정책목표와 정책설계를 하고, 그에 대응하여 지역은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 집권적 농정추진체계이다.

농업기반을 유지하는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농업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농촌은 인구과소화,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농업·농촌 발전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농업·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한 농정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의 전환과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농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정의 분권화는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전략의 하나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고, 지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의미가 있다. 농업인과 지역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 환경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농업직불금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역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더 효율적
이므로, 농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농정개혁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이 보다 차별성 있는 정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제시하여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11.7조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군특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농촌정책분야에서 지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농정개혁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재정분권에 따라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만큼 지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직불제 중심의 농정추진이라는 비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지역과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농정에서도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역간 차별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앙정부의 농정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업부문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과제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성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재정지출은 농정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농정개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재정운영 조정이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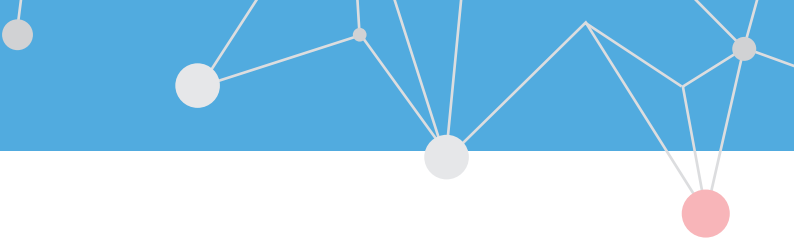
첫째, 중앙정부 농정과 지방정부 농정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사업과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먼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사업 및 전국적 효과가 큰 영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 수급안정사업, 기술개발 그리고 농가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조율을 더 높여 지방비 부담을 축소하고, 정책추진체계에서도 지방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도록 지방농정국의 도입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수행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직불제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을 지역이 더 많이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중요하고, 사업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이 담당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방의 부담을 축소하는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많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으로 지역의 자주재원을 확대하여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대되면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도록 실질적으로 농정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책사업을 너무 많이 세분화하면 그에 대응하여 지방농정사업이 많아지고, 지역의 농정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지역이 자체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농정사업을 대행하는데 집중하게 되고, 또 충분히 사업지침을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중앙정부 농정의 추진에 대해서는 어젠다 방식으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U농정은 중앙정부가 핵심 어젠다를 제시하고, 지역은 그에 적합한 차별적인 사업을 계획하여 승인받으면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혁신, 경영체 육성, 조직화, 사회적 통합 등 6개 어젠다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역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자율성을 주고 있다. 지역이 농업·농촌개발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적격성을 심의하여 승인하면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지역의 자율성과 계획성을 중시하도록 한다.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다섯째, 농촌개발에 대한 균특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분권 과정에서 3.5조원에 이르는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균특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원하였던



농특회계 전출액을 축소하게 된다. 축소된 균특회계 이전 재정을 보다 중앙정부 역할에 적합한 사업으로 확대·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여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추진에 대해 보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새로운 중앙정부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농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개편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는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촉발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가지고 있고, 각각은 고유한 영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농정에서 기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주로 융자지원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 재정지원 효과는 낮다. 지방분권화로의 농정사업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기금사업의 재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현장점검 리포트

02 재정사업 현안진단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에서는 농업경영체 지원 예산사업의 현황 및 효과성 파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2018년 4분기에 실시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소개한다.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란?

▶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농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및 국민 체감복지 제고, 지역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본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78개 시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82개 군 지역을 배분하였다.

[표 1.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 경과]

연도	내용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농어촌지역 특화 교통수단 확보 이슈 대두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개발
2014~2015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 (행정지원)한국마사회 → ‘(16)한국농어촌공사
2017	농촌대중교통(100원택시)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농식품부) → 농식품부(군)·국토부(시) 사업지구 분할 및 공동 수행 결정
2018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국 160개소로 확대 시행 농식품부: 82개소(군 단위), 국토부: 78개소(시 단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8. 『2018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250억 원 증액된 2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2개소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350백만 원(국고 50%, 지방비 50% 이상)이다. 도지사가 예산 배분 및 관리를 하며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된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버스형과 택시형이 있으며 2019년 기준 버스형은 300백만 원, 택시형은 50백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관할지역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 시군이 지원 대상이 되며, 지역 내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을 사업 시행자로 활용가능하다. 단,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발급이 필요하다.

▶ 추진 현황

2018년 7월 기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운영 사업체수는 76개군 78개로, 택시형 74개소, 버스형 4개소(13개 노선)가 운영되고 있다.

[표 2. 2018년 운영 현황]

구분	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78	1	1	1	3	12	9	7	8	17	9	10
버스형	4	-	1	-	1	1	1	-	-	-	-	-
택시형	74	1	-	1	2	11	8	7	8	17	9	10
사·군	76	1	1	1	3	11	8	7	8	17	9	10

주: 강원(횡성), 충북(증평)의 지자체는 버스형과 택시형을 중복 운행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8. 『2018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대중교통이 미흡하고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적합한 교통노선을 발굴하고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밀착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 문화, 복지 접근성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3. 교통모델 도입 전후 비교]

도입 전	⇒	도입 후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41.6점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90.5점
(읍·면소재지까지 소요시간) 월평균 38.5분		(읍·면소재지까지 소요시간) 월평균 14.5분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32.8분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4.5분
(버스 대기시간) 평균 18.9분		(버스 대기시간) 평균 6.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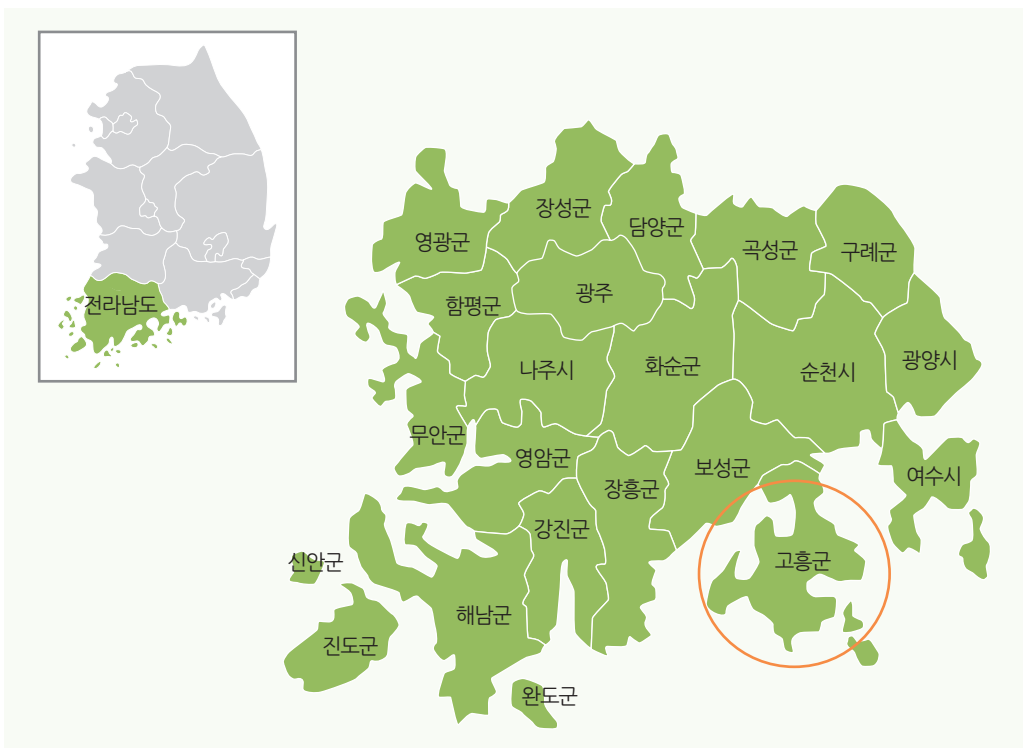
자료: '16년 지원 17개 사·군 18개 사업모델 대상 모니터링(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현장점검 리포트

▶ 고흥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¹⁾

유자로 친숙한 고흥군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3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기반의 부족, 빠른 고령화와 함께 교통 인프라 낙후라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외지와의 연결은 해상과 도로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이 농촌에 머물고,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흥군 내의 이동은 녹록치가 않다. 그렇다면 고흥군에서는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림 1. 고흥군의 입지조건]



출처: 전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1) 본고는 2018년 11월 8일에 실시한 고흥군 경제유통과 담당자 및 아평리 이장님과의 인터뷰 내용 및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고흥군은 2개의 읍(고흥읍·도양읍)을 포함해 16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전반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불리한 입지조건과 척박한 인프라를 갖는 고흥군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한때 10만 군민(95)이 머물던 고흥군은 2018년 12월 기준 인구가 6만 5,777명까지 줄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65세 이상 인구가 2만 5,568명으로 전체 인구의 38.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도 가장 높은, 말 그대로 초고령화 지역이다.

■ 농촌지역 군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철도가 없는 고흥군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이다. 운수업체는 고흥여객과 대흥여객으로 각각 44대, 5대의 버스가 110개의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운수업체에 소속된 운전자 수는 62명(고흥 57명, 대흥 5명)이며 운행횟수는 774회/1일 수준이다(18년 12월 기준). 이들이 은행, 병원, 시장 등이 모여 있는 읍·면 중심지에 가고자 하는 군민의 발인 셈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왔다.

■ 버스 이용료 단일화로 군민의 경제부담은 낮추고, 행정 편의는 높이고

고흥군 대중교통 정책 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인 ‘천원버스’(성인 기준)²⁾가 있다. 단순한 정책에 불과해 보이지만, 추가 예산은 물론 운수업체와의 협의도 필요했다.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16년 12월, 고흥여객 및 대흥여객과 협약하여 노선에 관계없이 버스요금을 ‘천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운행거리가 10km 초과될 때마다 요금이 가산되었고 그 비용은 1,200원에서 많게는 4,000원에 이른다. ‘천원버스’ 운영은 군민들에게는 비용적인 부담 완화를, 버스업체에게는 현금을 고집하는 고령의 군민들에게 노선 확인 후 거스름돈을 챙겨줘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주었다.

■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

여기에 더해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마을 버스를 2016년부터 운행해오고 있다. 고흥여객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11개 읍·면의 87개 마을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추가로 운행하는 것이다. 23인승 소형버스 2대가 남부권(도양읍, 풍양면,

2) 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며, ‘수요형버스’에도 동일요금이 적용된다.

도덕면, 봉래·동일면), 북부권(점암·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두원면)을 주 1~2회 운행한다. 당연히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요금도 '천원'(성인기준)이다. 다만 운행요일이 체계적이지 않고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아직 사업의 효과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권역별 노선 개편 또는 운행횟수 증가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 새로운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의 도입-

위에 소개한 정책들의 보완 형태로 최근 고흥군민의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100원 택시'이다. 단어 그대로 단돈 '100원'으로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100원 택시'는 교통 불편이 큰 농촌의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일환으로, '18년도 기준으로 전국 82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시·군마다 사업의 이름도, 운영 방식도 다양하다. 전국각지에서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비교적 빠르게 체계를 갖춘 고흥군의 '100원 택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100원 택시'의 운영 방식

고흥군의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800m 이상, 3가구 이상 거주하는 촌락의 실제(상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에게 매월 3매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며, 차량보유자, 미거주자, 초·중·고등학생, 영유아, 거동 불능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위치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은 30개이며, 혜택을 받는 이용자수는 1,110가구 1,300여명에 이른다.

■ 최소 한 달에 세 번, 100원으로 택시타고 시장에

'100원 택시'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매월 군청에서 읍·면사무소로 택시이용권을 발부하면, 읍·면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해당 마을의 이장에게 배분한다. 이를 전달받은 대상 군민은 필요시, 지정 택시에 연락을 취하여 이용권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된다. 이때 지정택시는 각 읍·면 소재지에 등록된 택시이다. 사실 본인에게 주어진 이용권은 매월 3매이지만, 삼삼오오 짝지어 이용하며 나름의 효용극대화를 꾀하신다고 한다.

■ 마을별로 정산업무 부담도 최소화

정산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택시기사가 운행기록지, 영수증, 이용권을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의 확인 절차 후 정산이 완료된다. 단, 마을별로 중심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용권 금액 역시 다르며, 이용권은 최소 3,900원에서 최고 14,9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산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고 한다.

■ 군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100원 택시에 대한 군민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용권은 이월이 가능하고, 필요시 여럿이 모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장이 서는 날, 공중목욕장 개장 날 등에 맞춰 마을 사람끼리 모여 이동하면 월 3회 이상은 이용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심지 활성화 측면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한다. 또한 등록 택시들도 고정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있다. 2018년도 5월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1명마저도 이용권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더니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 운행 기록 관리 및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개선도 필요

그러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운행기록 부문의 철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권 재판매 등 악용사례도 간혹 포착된다고 한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이 인근 읍·면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용권에 추가금액을 지출하여 원하는 읍내에 가기도 한다. 따라서 이용권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군민의 요구도 있지만, 소재지에 등록된 택시 간의 운행 원칙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의 완화는 아직은 쉽지 않다고 한다.

■ 버스형 모델과 택시 모델의 상호보완으로 효율 극대화

이 외에도 마을회관-버스정류소 거리기준을 700m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고흥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거리기준을 완화할 경우, 10여개 마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용자 자격 요건도 완화하여 '100원 택시'의 혜택을 더 많은 군민에 확대하고자 검토 중이다. 반면 기존 대중교통과의 경합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택시와 버스 양쪽의 농촌형 교통모델은 확대 추진하되, 기존 대중교통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운영하고 있어 경합문제는 없었다고 보았다.



■ 효율적인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농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으로, 높은 효율성과 만족도를 확인한 정부도 이 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있다. 이에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와 정부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흥군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다. 담당자는 대체 교통수단(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에 따른 기존 운수업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협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촌형 교통모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림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대응하는 전담팀이 절실하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 양평군 청운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³⁾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 지역으로 양평군의 동부에 위치해있다. 청운면의 북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횡성군이 위치해 있다. 청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32.2%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지역에 해당된다. 게다가 청운면은 양평군에서도 대표적인 교통취약지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이동수단 지원이 시급하였다. 이에 청운면 각 이장님들과 교통사업 담당자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본 사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청운면이 어떻게 우수사례가 되었는지 단계별로 살펴 보자.

[그림 2. 청운면의 입지조건]



■ 배차시간이 긴 농어촌 버스와 단 2대 뿐인 택시

청운면 내에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는 1일 2~5회로, 배차시간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6시간에 이르고 일반 시내버스 또한 1일 2~3회 운행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매우 길었다. 또한 버스 정류장까지 최소 10분 이상 걸어야 하기에 거동이 불편하고 짐이 많은 노인들

3) 본고는 2018년 11월 7일에 실시한 양평군 교통과 담당자와 청운면사무소 담당자 및 삼성1리 이장님과의 인터뷰 내용 및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택시를 이용하고자 해도 청운면에 상주해 있는 택시 수는 단 2대 뿐이고, 콜택시의 경우에도 공차거리가 멀어 택시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매우 컸다.

■ ‘푸른 구름 꿈 마을 청운행복버스’의 시작

이처럼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취약지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과 담당자와 마을의 이장님들이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 그런 이들에게 농촌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은 좋은 기회였고, 양평군 서종면 ‘서종YP행복마을버스⁴⁾’를 참고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다. 가장 먼저 기존 농어촌 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농촌형 교통모델만의 신규노선과 운행시간을 구성하고 시범 운행하였다. 이후 약 3~4개월 동안 문서상의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공모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7월부터 1억 4천만 원(2017년 9천만 원, 2018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푸른 구름 꿈 마을 청운행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푸른 구름 꿈 마을 청운행복버스’

청운면 농촌형 교통모델 시행주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청운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다. 지역 주민인 자율방범기동순찰대원이 운행기사가 되어 11인승 스타렉스 1대를 이용하여 3개 노선⁵⁾을 1일 8회로 주 5일 운행 중이다. 기사는 일자, 출발 및 도착 시간, 이용자 수 등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울 경우 직접 승객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달한다고 한다.

4) 양평군 서종면은 2014년 10월 ‘서종YP행복마을버스’라는 이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현재는 전액 군비로 운영하고 있음.

5) 신륵·삼성·다대리 노선, 갈운리 노선, 비룡·가현리 노선

[그림 3. 청운면 푸른구름 꿈 마을 청운행복버스]



자료: 동부중앙신문(2017.06.30.일자 기사) “양평군 청운면, 7월 1일부터 행복버스 운행”

■ 운영비 5천만 원은 국비와 군비를 5:5로 매칭

2018년 행복버스 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국비와 군비를 5:5로 매칭하여 각각 2,5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전환된다. 운송수익금의 경우,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는 아니며 요금 체계에 따라 받은 금액을 전체 수익금으로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시 운송수익과 교부금에서 집행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기사의 인건비는 현재 월 200만 원 수준이며 2019년에는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외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문화·의료시설 이용 횟수 또한 크게 늘어

행복버스는 정해진 정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탑승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은 승객의 요청이 있을 시, 집 앞까지 방문하여 승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 담당자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약 3,000명이 이용하였고 이는 2017년 대비 약 30%증가한 수치로, 행복버스 운행 후 주민들의 외출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주민들은 일정요금⁶⁾을 지불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목욕탕, 농협 등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가 쉬워져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6) 이용요금으로는 일반인 1천원,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약자 500원, 6세 미만의 어린이 10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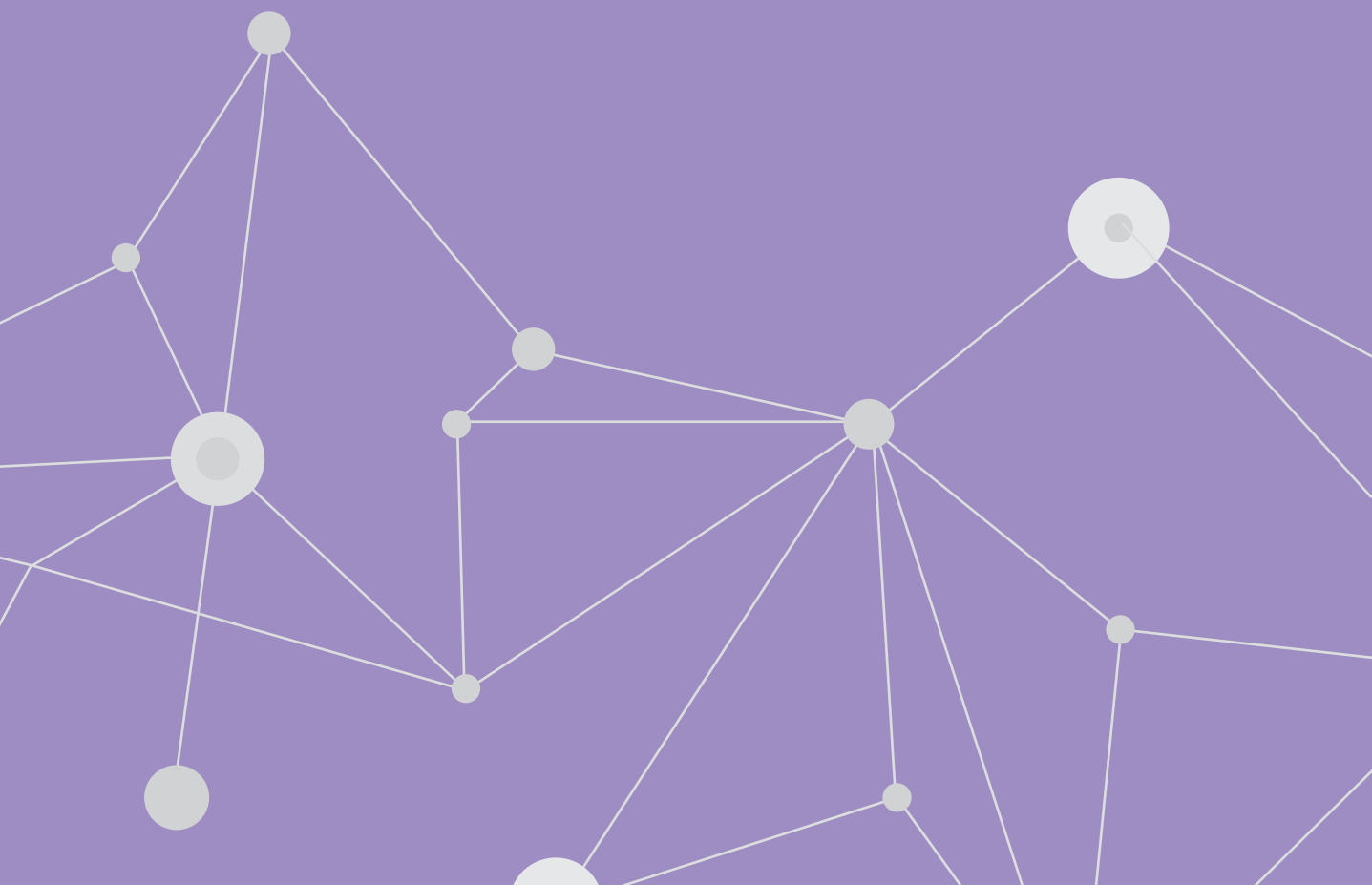
■ 행복버스 차량 수와 차량 내 편의장치 부족

행복버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월등히 향상되었음은 분명하지만 개선사항 또한 존재한다. 우선 차량 부족으로 배차 시간이 길며 편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차량 대수를 늘려 다양한 배차시간 제공 및 왕복 운행이 가능해진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탑승객을 고려하여 차량 내 리프트와 같은 편의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효율적인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운면 담당자는 차량 보험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운면은 여타 지역에 비하여 산간 지역이 많고 눈·비가 자주 오는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대중교통 버스들이 가입하는 버스공제조합보험 가입도 불가능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7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부담됨을 언급하며 본 사업에 한해서는 버스공제조합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보험 상품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의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소통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03 재정사업 심층평가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03 재정사업 심층평가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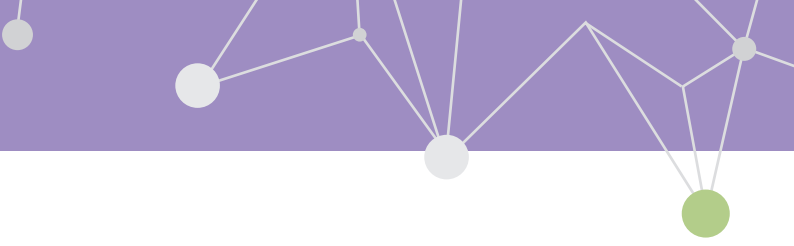


● 심층평가의 개요

축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나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축산업 성장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축분뇨 문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가축분뇨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재정사업이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가축분뇨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가축분뇨처리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층평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사업 평가는 관리의 적절성 및 성과평가, 효과성 분석



등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사업 수혜자 현장조사와 외국의 가축분뇨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개선방안과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가축분뇨의 처리실태 및 정책 변화

축산업 성장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대부분이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다. 2006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026만 톤에서 2017년 4,84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정책과 재정사업 추진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물량은 2006년 82.7%에서 2017년 91.0%로 증가하였다. 반면, 개별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방류되는 비중은 2006년 9.1%에서 2017년 8.0%로 감소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 처리 등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비료관리법」, 「신재생에너지촉진법」 등이 있는데, 가축분뇨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고시들과 지자체별 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를 계기로 2000년 중반부터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은 자원화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악취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앞으로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하여 공급할 경지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퇴·액비의 살포지 확대와 더불어 가축분뇨 발생량과 퇴·액비화로 자원화되는 물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토양의 양분 과잉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양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분관리제가 도입되면 퇴·액비를 공급할 농경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퇴·액비의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퇴·액비화 기준을 신설하였고, 퇴·액비의 부속도 기준을 강화하여 2019년 3월(액비), 2020년 3월(퇴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농가의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액비의 경우, 여름철 비수기 액비 수요 감소로 계절적인 시비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수기에 액비 저장 용량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액비를 무단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액비 살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수기 액비 살포를 위한 수요처 확보가 관건이다.

● 적절성 및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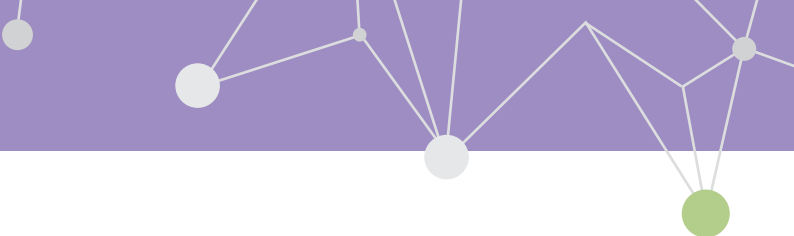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 중 버려지는 자원을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은 물론 적정 처리를 통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이용되는데 사업의 목적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정책 지원에 힘입어 자원화율은 2006년 82%에서 2017년 91%로 증가하였으며, 설정된 성과지표 목표치는 최근 4년 동안 100%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신청자가 사업 추진에 있어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집행률은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퇴·액비의 부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위탁 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지확보나 주민 설득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률 등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규 대상자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개별농가 단위나 기존 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수의 공동자원화 시설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축분뇨 수거단가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지원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과지표 목표치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여건을 볼 때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고정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성과지표



로써 가축분뇨 자원화율과 더불어 악취민원 건수, 악취측정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생산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토양개선과 생산기반의 질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과 지표로 토양(논, 밭)의 유기물 함량 이용되는데 성과지표와 사업의 목적과의 연계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2014년을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률이 1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와 사업 수혜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사업은 농경지의 가축분퇴비 공급으로 토양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사업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과 화학비료 사용의 감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울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비료 품질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비료업체의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여러 주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함에 따라 복잡해진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급단가 계약 체계, 사후관리 체계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재의 성과지표는 논과 밭의 유기물 함량 평균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논·밭·과수원에 따른 유기물 함량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작물별 적정 시비량을 고려하여 유기질비료를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고 유독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유박 비료 등 유기질비료의 보조는 낮추고, 가축분퇴비의 보조를 높이는 등 보조 수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효과성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의 가축분뇨 처리 목적이 퇴·액비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것이므로, 자원화를 통한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재정사업의 주요 효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화학비료 대체효과는 자원화된 가축분뇨의 비료 성분량을 추정하고 화학비료 가격을 곱해 비료 상당액으로 계측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이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자원화율,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원화된 가축분뇨의 질소 성분은 2017년 기준 29만 1,962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인은 29만 4,140톤, 칼리는 23만 1,884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자원화된 가축분뇨의 비료 상당액은 연평균 4,0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연평균 예산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상당액 기준으로 효과를 평가하더라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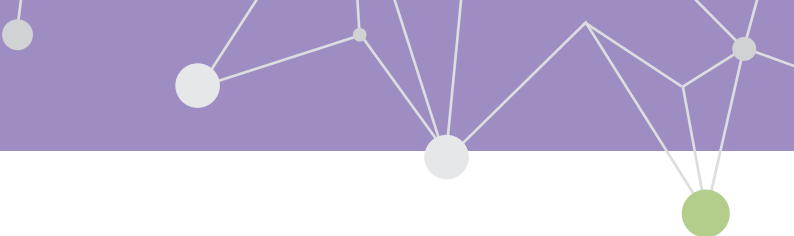
재정지원이 가축분뇨 자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액이 1억 원 증가하면 자원화 물량은 약 9천 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지원액이 1% 증가하면 자원화율은 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비화율은 0.01%, 액비화율은 0.9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장조사 결과의 시사점

현행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자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관련 현장조사 결과, 축산농가들은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으며, 생산된 액비를 활용하는 경종농가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업체들은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분뇨 수거비 단가 현실화, 액비 살포비 지원방식 및 시설 개보수 지원방식 개선, 부처 간 상이한 지원방식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가와 지역주민의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인식 전환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유통 및 살포를 막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둘째, 공동자원화시설 경영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



단가를 현실화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지원이 가능하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시설 지원 단가 등에 차이가 있어 두 부처가 협의를 통해 적정 지원단가를 산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5년 차에 개보수 자금 신청을 받는 현행 방식보다는 환경부 사례를 참고하여 개보수 자금의 지원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품질·맞춤형 액비 생산 활성화를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대해 에너지화 연계를 장려할 필요도 있다.

● 주요국의 가축분뇨 관리 사례의 시사점

일본, EU 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와 중국, 미국 등 외국의 가축분뇨 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 질산염법, 농지조화법, 인 시비 상한제 등 질소와 인의 함유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도입 예정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축 사육마릿수를 관리하여 인 성분의 생산 제약 및 경축순환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축 사육권 등의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 사육마릿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처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소각, 연료화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혼합하도록 허용하였고, 독일에서는 토양에 비료를 공급할 때 가축분뇨와 바이오가스 잔여물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에서는 가축분뇨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액비 이용 활성화 및 가축분퇴비 촉진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한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전력을 생산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의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의 공공성과 취약한 수익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이 이미 과잉인 상황에서 경지면적 감소와 사육두수 증가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더라도 공급할 농경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기준 강화로 개별농가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퇴·액비 시비가 계절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퇴·액비의 살포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자원화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 등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퇴·액비화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위탁처리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설의 운영 안정화가 필요하다. 셋째,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퇴·액비의 수요처 확대를 위해 맞춤형 발효액비 사업, 실질적인 농경지의 액비 살포 허용, 퇴·액비의 광역유통 활성화, 퇴·액비 우선 사용토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농경지 양분을 고려한 부숙유기질비료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축산물 수급을 감안한 축산분야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종합평가

심층평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 관리의 적절성 및 성과평가, 효과성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 등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해당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 효과도 크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이 자원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토양의 양분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환경부의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내용은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우리



나라의 자원화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세부 내역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토양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사업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률이 매년 100%에 달하고 있어 사업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과 화학비료 사용의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04 농식품 재정이슈

직불제, 농업의 역할 변화를
견인하는 정책 수단

04 농식품 재정이슈

직불제, 농업의 역할 변화를 견인하는 정책 수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 농업의 공익적 역할 변화를 견인하는 직불제로 개편 필요

농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도 농업의 식량 공급이라는 공익적 역할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고, 가계지출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았던(높은 엥겔계수) 상황에서 농업의 역할은 식량의 양적 공급 확대가 최우선이었다.

이를 위하여 농업부문은 다수확품종 재배와 비용절감을 위한 집약적 영농이 불가피하였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값싼 농산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 자체가 농업의 공익적 역할이었다. 식량의 양적 확충을 위하여 정부는 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하고, 핵심 품목인 쌀 가격 관리를 통해 농업소득을 지지하였다.

이제 소득성장, 기술발전 그리고 시장개방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식량 공급이라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도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양적 측면)은 물론이며, 질적 측면(품질 및 안전성)에서도 농업부문의 충실한 역할을 요구한다.

양적 성장과 그에 따른 집약적 영농으로 인한 관행적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수준에 대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업의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 가축분뇨와 악취 등 사회적 비용 유발 및 환경부하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직불제도 농업의 역할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익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쌀 중심의 현행 직불제는 식량의 양적 공급이 핵심 공익적 역할이었던 시기에 쌀 시장개방 가능성과 시장왜곡 최소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직불제 하에서 쌀은 최근으로 올수록 구조적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관행적 영농방식에 따른 환경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쌀 이외 곡물자급률 하락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산 농산물 선택권이 축소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곡물자급률 추이를 보면, 1995년 55.7%에서 2005년 53.6% 그리고 2016년에는 50.9%로 하락하여 왔다. 또한 쌀을 제외한 작물의 자급률은 콩 7.0%, 밀 0.9%, 옥수수 0.8%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보전, 경관유지, 수질 및 토양 관리 등을 위한 농업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은 관행농법으로 인한 환경부하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고, 미래 환경·자원보전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불제는 농산물의 양적 공급방식으로부터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영농방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농업 영위 과정에서 수행하는 환경 및 자원관리 등 외부효과(시장 실패)에 대한 소득보전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공익형직불제로 전환을 위한 검토과제

현행 직불제를 공익적 역할에 근거한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지 제도의 개편 수준을 넘어서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 역할로부터 환경 및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미래 국토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갖는다. 공익형직불제로의 확대 개편을 위해 필요한 검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정의 기본 방향이 생산성 제고 지원 위주에서 공익적 역할 제고 지원 방향으로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량수입국 입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재 위치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와 국제적 농정의 흐름은 공익적 역할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식량공급, 환경자원 보전 등 이미 충분한 공공재(공익적 역할)를 생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축질병 및 가축분뇨 문제, 농산물 안전성 문제 제기 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 가능한 교차준수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납득하고, 농가가 실천 가능하며, 정책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교차준수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익적 역할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역 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공익적 역할을 발굴하고,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교차준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다섯째,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익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안전성, 품질 제고, 환경자원 보전 등은 농업부문의 역할이지만 지역사회 유지, 경관보전 등은 농촌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U는 자연조건제약지역에 대한 직불을 실시하지만 농촌개발 정책부문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직불제로부터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방식의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할 경우, 고정직불화로 전환한다고 해서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소득보전 요구 가능성, 쌀 지원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기존 쌀농가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우려가 있다.

쌀 공급과잉 문제는 쌀 생산만을 줄이는 소극적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며, ‘쌀에서 곡물로’ 정책을 전환하는 근본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쌀 농가의 가격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수급조절 방식의 체계화, 시장가격에 근거한 급격한 가격하락 대응 수단 마련, 경영위험에 대한 정부와 농가의 공동 관리 방식의 확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직불제 예산 확보와 합리적 운용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05 경제 동향

경제성장

고용

소비

물가

수출입

금융·환율

요약

-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양호한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증가세 둔화로 2017년 대비 2.7% 성장
 - '18년 하반기 실질 농림어업 GDP는 14조 1,7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 '18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 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의료, 오락 · 문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증가
- '18년 하반기 전체 산업 취업자수는 상반기 대비 68만 명 증가, 실업률은 평균 3.9%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 취업자 증가세
 - 농림어업 하반기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약 8만 명 증가
- '18년 하반기 평균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2.2% 상승
- '18년 하반기 수출물가지수는 86.9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하고, 수입물가지수도 89.2로 전년 동기(82.1) 대비 8.6% 상승
 -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수입과일 및 육류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임산물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

05 경제동향⁷⁾

● 경제성장

- 민간소비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은 2017년 대비 2.7% 성장
 -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3/4분기 0.5%, 4/4분기 1.0% 증가
 - 건설투자는 3/4분기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줄어 전기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4/4분기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2% 증가
 - 수출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 중심으로 전기 대비 3/4분기 3.9%, 4/4분기 2.2% 감소
 - 수입은 3/4분기 기계류가 줄어 전기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4/4분기 원유, 석탄 및 석유 제품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기 대비 0.6% 증가

[표 1.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구분	2017p ¹⁾					2018p ¹⁾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²⁾
GDP 성장률	3.1	1.0	0.6	1.4	-0.2	2.7	1.0	0.6	0.6	1.0(3.1)
민간소비	2.6	0.5	1.0	0.8	1.0	2.8	0.7	0.3	0.5	1.0(2.5)
정부소비	3.4	0.6	1.2	1.9	0.5	5.6	2.2	0.3	1.5	3.1(7.1)
건설투자	7.6	4.2	0.9	1.1	-2.3	-4.0	1.8	-2.1	-6.7	1.2(-6.0)
설비투자	14.6	4.5	4.3	0.2	-0.7	-1.7	3.4	-5.7	-4.4	3.8(-3.3)
총수출	1.9	2.1	-2.7	5.6	-5.3	4.0	4.4	0.4	3.9	-2.2(6.5)
총수입	7.0	4.9	-1.0	3.2	-2.9	1.5	4.9	-3.0	-0.7	0.6(1.6)

주 1) 2017p, 2018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7)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과 김문희 연구원(kmh0618@krei.re.kr)이 「농업·농촌경제동향」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 경제활동별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승세
 - 농림어업은 3/4분기 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이 줄어 전기 대비 5.5% 감소하였으나, 4/4분기 축산물 생산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5.8% 증가
 - 제조업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4분기 2.3%, 4/4분기 0.8% 증가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로 전기 대비 3/4분기 0.5%, 4/4분기 0.7% 증가

[표 2.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구분	2017p ¹⁾					2018p ¹⁾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²⁾
농림어업	0.3	3.9	-0.3	-1.8	0.2	1.4	6.0	-2.8	-5.5	5.8(2.9)
제조업	4.4	1.7	0.1	2.7	-1.7	3.6	1.6	0.6	2.3	0.8(5.5)
서비스업	2.1	0.4	0.7	1.0	0.3	2.8	1.1	0.5	0.5	0.7(2.7)
(도소매 및 음식숙박)	0.7	-1.3	0.6	1.2	0.4	1.4	-0.8	0.8	0.5	1.0(1.5)
(정보통신)	2.5	0.9	-0.5	2.4	1.5	2.8	1.1	-1.6	2.0	-0.8(0.7)
(부동산 및 임대)	0.9	1.9	-0.7	0.6	-0.2	2.2	2.6	-0.7	0.2	0.2(2.3)
(보건 및 사회복지)	7.3	0.8	2.2	3.0	1.6	7.4	0.2	0.8	4.8	3.0(9.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4	-0.7	2.0	0.4	-1.8	1.4	3.6	-0.7	-1.7	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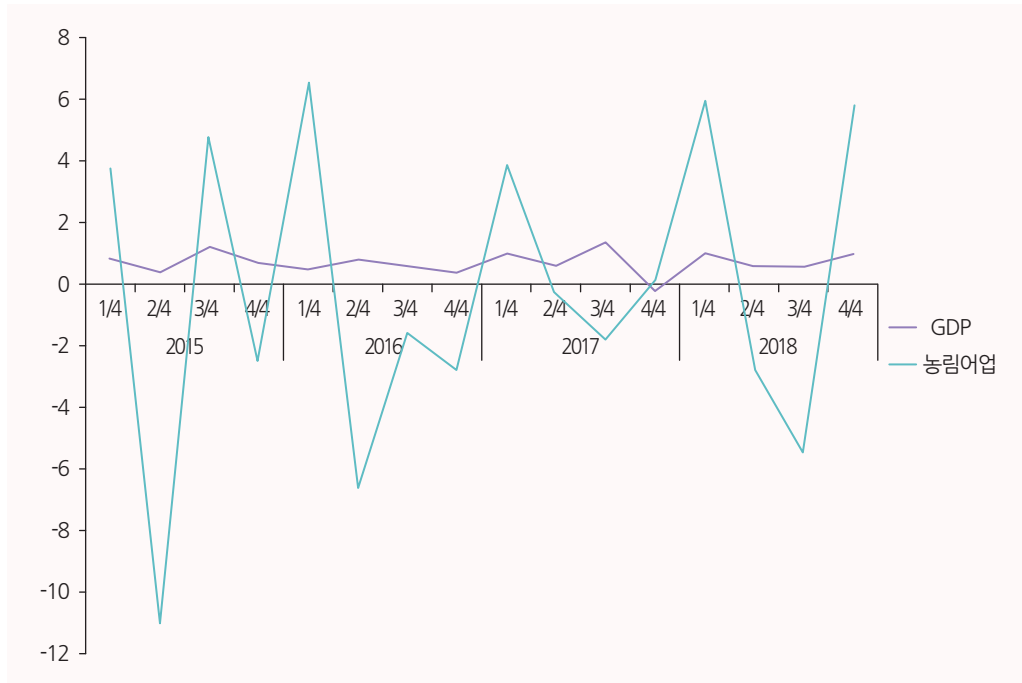
주 1) 2017p, 2018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7, 2018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고용

- 2018년 하반기 전체 산업 취업자 수는 5,399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약 68만 명 증가했으며, 하반기 평균 실업률은 3.9%
- 2018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69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2% 감소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 증가세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는 33만 3천 명, 일용근로자 5만 1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25만 6천 명 감소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 9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6천 명 각각 감소

[표 3.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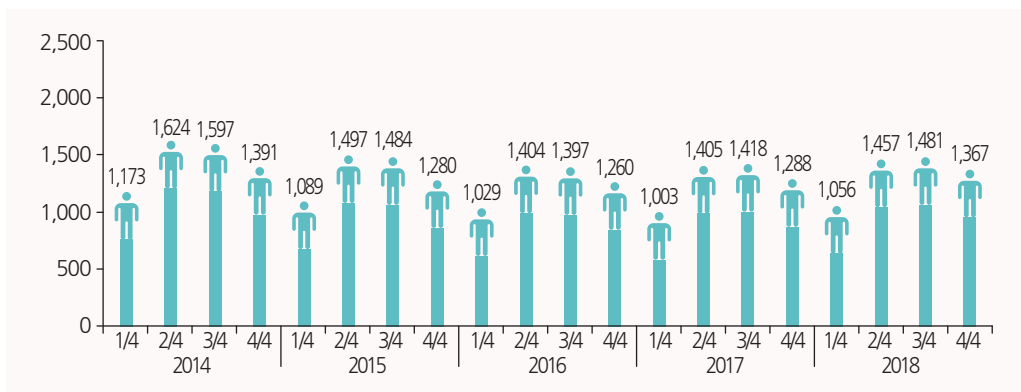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27,748	27,262	27,993	27,961	27,775	27,895	27,464	28,125	28,080	27,912	0.5
(경제활동참가율)	63.2	62.2	63.8	63.6	63.1	63.1	62.3	63.7	63.5	63.0	-0.2
취업자	26,725	26,100	26,919	26,998	26,883	26,822	26,283	27,019	27,015	26,971	0.3
- 농림어업	1,279	1,003	1,405	1,418	1,288	1,340	1,056	1,457	1,481	1,367	6.1
- 광공업	4,589	4,551	4,601	4,594	4,609	4,529	4,597	4,509	4,496	4,514	-2.1
(제조업)	4,566	4,530	4,579	4,570	4,586	4,510	4,575	4,487	4,479	4,499	-1.9
- 건설업	1,988	1,908	2,015	1,990	2,038	2,034	1,977	2,031	2,035	2,094	2.7
- 도소매· 음식숙박업	6,083	6,098	6,053	6,111	6,070	5,965	6,000	5,979	5,955	5,928	-2.3
실업자	1,023	1,162	1,074	963	892	1,073	1,181	1,105	1,065	942	5.6
실업률(계절조정)	3.7	3.7	3.7	3.7	3.7	3.8	3.7	3.8	4	3.8	2.7

자료: 통계청

- 2018년 하반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8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 2018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그림 2.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 소비

- 2018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5% 증가
- 2018년 11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3.8%)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3.3%),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0.5% 증가

[표 4. 소비동향]

단위: %(전기 대비 증감률)

구분	2017					2018p ⁴⁾				
	1/4	2/4	3/4	4/4	1/4	2/4p	3/4p	9월p	10월p	11월p
민간소비	0.5	1.0	0.8	1.0	0.7	0.3	0.5	-	-	-
소매판매	0.4	1.0	0.2	0.9	3.0	0.7	-0.5	-2.0	0.2	0.5
(내구재) ¹⁾	1.0	5.2	-3.0	1.4	5.4	2.2	-4.7	-7.5	1.5	3.3
(준내구재) ²⁾	-1.3	-0.5	1.1	1.4	2.8	1.0	2.2	2.6	0.5	-3.8
(비내구재) ³⁾	0.8	-0.5	1.4	0.5	2.1	-0.3	0.5	-1.1	-0.6	1.1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8년 분기 및 월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9년 1월 소비심리지수는 전월(97) 대비 소폭 증가한 98로 전년 동월(110) 대비 10.9% 감소

[그림 3.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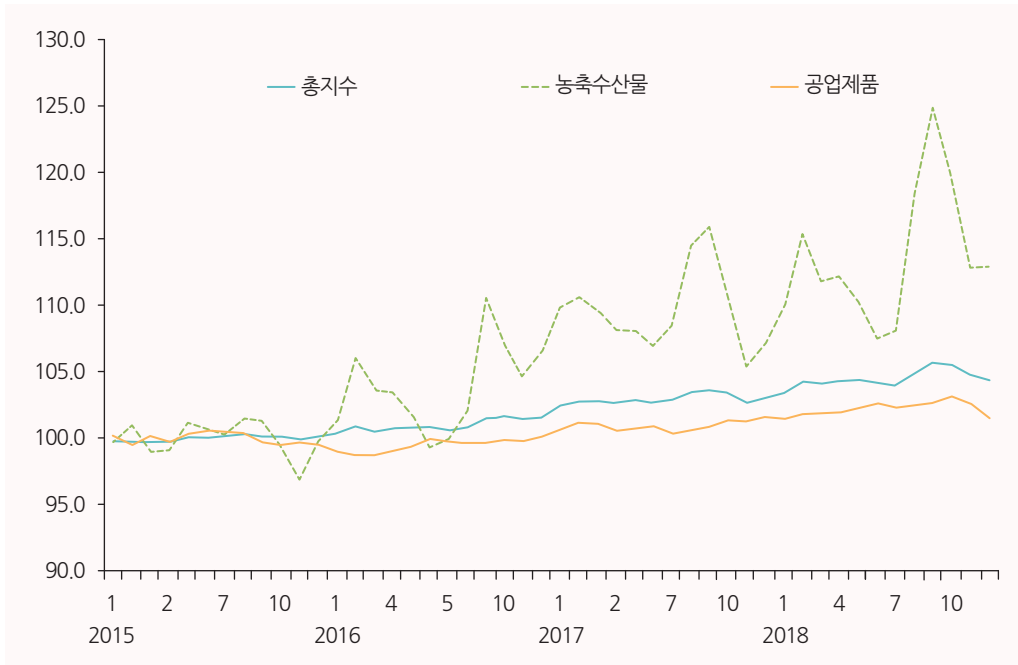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물가

- 2018년 하반기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2015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
- 2018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
 - 2018년 4/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하였고, 농산물 품목별로는 곡물, 채소, 과일, 기타농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11.0%, 12.6%, 1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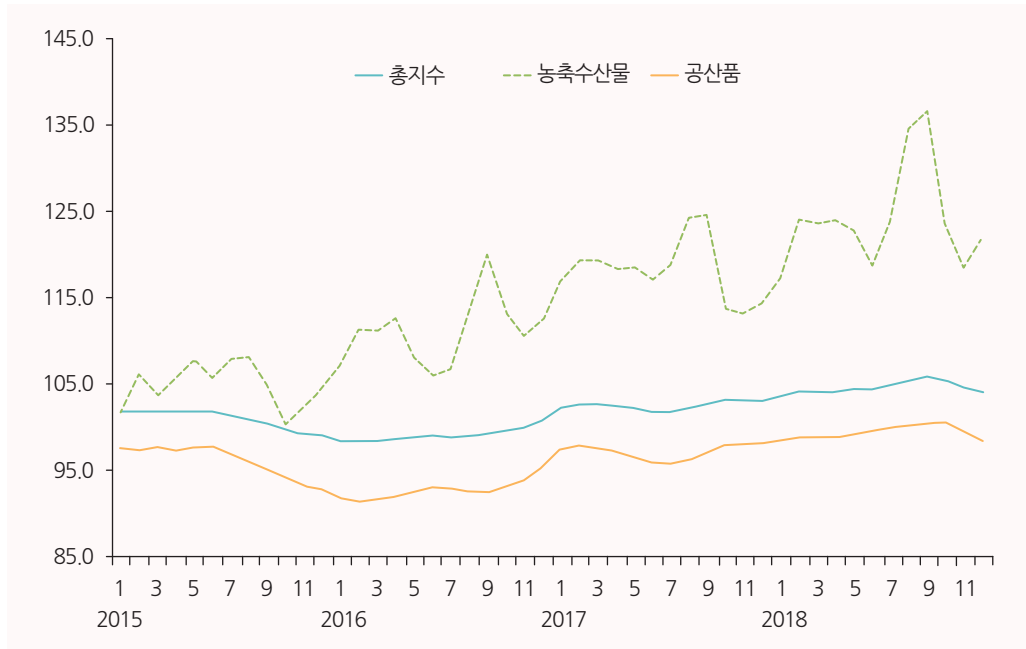
[그림 4.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18년 하반기 평균 생산자물가지수는 105.0(201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
- 2018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4.7(201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
 - 2018년 12월 기준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등의 물가가 올라 전월 대비 3.1% 상승,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물가가 내려 전월 대비 1.1% 하락,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 등은 하락하였으나 음식점 및 숙박 등의 물가가 올라 전월 대비 포함세

[그림 5.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8년 하반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4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
 - 곡물, 청과물,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축산물은 하락
- 2018년 하반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3.1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
 - 재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외의 지수들은 상승
- 2018년 하반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
 -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상승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농가교역조건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개선된 것으로 추정

[표 5. 농가가격지수(2015년=100)]

	구분	가중치	2016	2017			2018		하반기 평균	등락률 (%)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농가 판매 가격 지수 (A)	총지수	1000.0	102.9	107.6	103.6	104.6	107.6	109.2	108.4	4.1
	곡물	200.2	91.8	94.5	92.1	99.4	112.8	121.4	117.1	22.3
	청과물	313.9	111.5	121.8	113.7	118.5	116.8	116.9	116.9	0.6
	축산물	378.3	102.5	105.8	104.9	98.7	101.2	98.7	100.0	-1.8
	기타농산물	107.6	99.7	96.7	90.4	95.0	93.7	100.9	97.3	5.0
농가 구입 가격 지수 (B)	총지수	1000.0	99.3	100.9	101.1	100.8	102.7	103.4	103.1	2.1
	가계용품	484.8	101.3	103.3	103.6	103.1	105.0	104.9	105.0	1.5
	재료비	250.6	94.7	93.2	93.4	92.8	92.6	92.6	92.6	-0.5
	노무비	45.0	104.1	108.8	109.7	111.0	116.0	117.0	116.5	5.6
	경비	129.0	93.9	98.0	97.2	98.7	102.4	107.7	105.1	7.2
	자산구입비	90.6	106.7	109.4	110.1	108.4	111.5	112.1	111.8	2.3
농가교역조건 (A/BX100)		-	103.6	106.6	102.5	103.8	104.8	105.6	105.2	2.0

자료: 통계청

수출입

- 2018년 하반기 수출물가지수는 86.9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
 - 2018년 하반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하락하였으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8.4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 2018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84.1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0% 하락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하락

- 2018년 하반기 수입물가지수는 89.2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2018년 하반기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2.7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88.4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 2018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85.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

[표 6. 부분별 수출·입 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수출	총 지 수	85.7 (6.1)	86.2 (5.8)	84.8 (6.2)	86.0 (10.0)	85.9 (2.8)	85.7 (0.0)	84.3 (-2.1)	84.8 (-0.1)	87.8 (2.1)	86.0 (0.2)
	농림수산물	109.5 (7.4)	104.8 (6.1)	109.6 (7.5)	114.3 (11.4)	109.3 (4.7)	104.6 (-4.4)	103.6 (-1.1)	102.8 (-6.2)	105.8 (-7.4)	106.2 (-2.8)
	농 산 물	143.4 (-1.6)	139.8 (-4.0)	149.7 (4.4)	151.0 (-1.2)	132.9 (-5.5)	143.7 (0.3)	130.8 (-6.4)	135.9 (-9.3)	153.1 (1.4)	155.2 (16.7)
	축 산 물	85.6 (6.1)	86.1 (5.8)	84.7 (6.2)	85.8 (10.0)	85.8 (2.7)	85.6 (0.0)	84.2 (-2.1)	84.7 (0.0)	87.7 (2.1)	85.9 (0.2)
	공 산 품	84.6 (1.7)	85.8 (2.2)	83.2 (-0.2)	84.4 (4.1)	84.9 (0.9)	86.9 (2.7)	84.5 (-1.5)	86.2 (3.6)	89.0 (5.5)	87.8 (3.5)
수입	총 지 수	82.0 (6.5)	83.2 (9.7)	80.6 (5.0)	81.3 (8.4)	82.8 (3.2)	87.1 (6.3)	83.5 (0.4)	86.7 (7.6)	89.9 (10.5)	88.4 (6.7)
	농림수산물	94.0 (0.2)	97.9 (5.1)	93.7 (0.4)	92.9 (1.0)	91.3 (-5.4)	92.2 (-1.8)	90.8 (-7.2)	92.7 (-1.0)	92.6 (-0.3)	92.8 (1.6)
	농 산 물	82.9 (0.8)	86.8 (5.2)	81.6 (-0.7)	82.5 (2.9)	80.5 (-4.0)	82.9 (0.0)	81.0 (-6.7)	83.9 (2.8)	83.4 (1.0)	83.2 (3.3)
	축 산 물	113.7 (-1.8)	117.1 (3.4)	114.6 (0.7)	112.1 (-2.5)	110.9 (-8.3)	109.5 (-3.6)	109.3 (-6.7)	107.8 (-5.9)	109.3 (-2.4)	111.7 (0.7)
	공 산 품	84.6 (1.7)	85.8 (2.2)	83.2 (-0.2)	84.4 (4.1)	84.9 (0.9)	86.9 (2.7)	84.5 (-1.5)	86.2 (3.6)	89.0 (5.5)	87.8 (3.5)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222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3,46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부류별로는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은 각각 22.8%, 33.9% 증가
- 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2,735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175억 3,200만 달러
 - 수입과일 및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임산물도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표 7. 부분별 수출입 물가지수(2010년=100)]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농림축산물	1,989	3,292	1,938	3,535	1,970	3,481	2,225	3,467	14.8	-1.9
	농산물	1,499	2,919	1,547	3,128	1,553	3,064	1,541	2,942	-0.4	-5.9
	축산물	36	161	43	181	55	195	65	222	52.0	22.8
	임산물	454	213	349	226	362	222	620	302	77.7	33.9
수입	농림축산물	26,424	16,243	26,463	16,051	27,417	17,768	27,358	17,532	3.4	9.2
	농산물	16,671	9,501	16,344	9,093	17,255	10,048	16,937	9,853	3.6	8.4
	축산물	830	3,302	779	3,302	924	3,786	856	3,736	9.8	13.2
	임산물	8,923	3,440	9,339	3,656	9,238	3,934	9,566	3,943	2.4	7.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140억 6,500만 달러이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2,513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 농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축산물 12.6%, 임산물 6.2% 증가

[표 8.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하반기		하반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4,525	12,516	25,133	14,065	2.5	12.4
농산물	14,797	5,965	15,396	6,911	4.0	15.9
축산물	736	3,121	791	3,514	7.5	12.6
임산물	8,990	3,430	8,946	3,641	-0.5	6.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금융·환율

- 2018년 하반기 평균 국고채(3년) 금리는 1.98%로, 상반기 대비 0.25%p 하락
- 2018년 12월 국고채(3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 하락,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등으로 하락
 - 회사채(3년)금리 역시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변동
 - 단기시장금리는 11월 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 반복
 -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 하락, 글로벌 IT기업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

[표 9. 금리동향]

단위: 연리(%)

구분	2017	2018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2.10	2.19	2.28	2.27	2.19	2.25	2.18	2.10	2.02	1.95	2.01	1.94	1.83
회사채 ¹⁾	2.65	2.72	2.82	2.83	2.79	2.86	2.81	2.75	2.66	2.40	2.45	2.40	2.30
CD유통수익률(91일)	1.66	1.66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68	1.71	1.91
콜금리 ²⁾	1.51	1.49	1.49	1.49	1.47	1.50	1.49	1.49	1.50	1.54	1.52	1.51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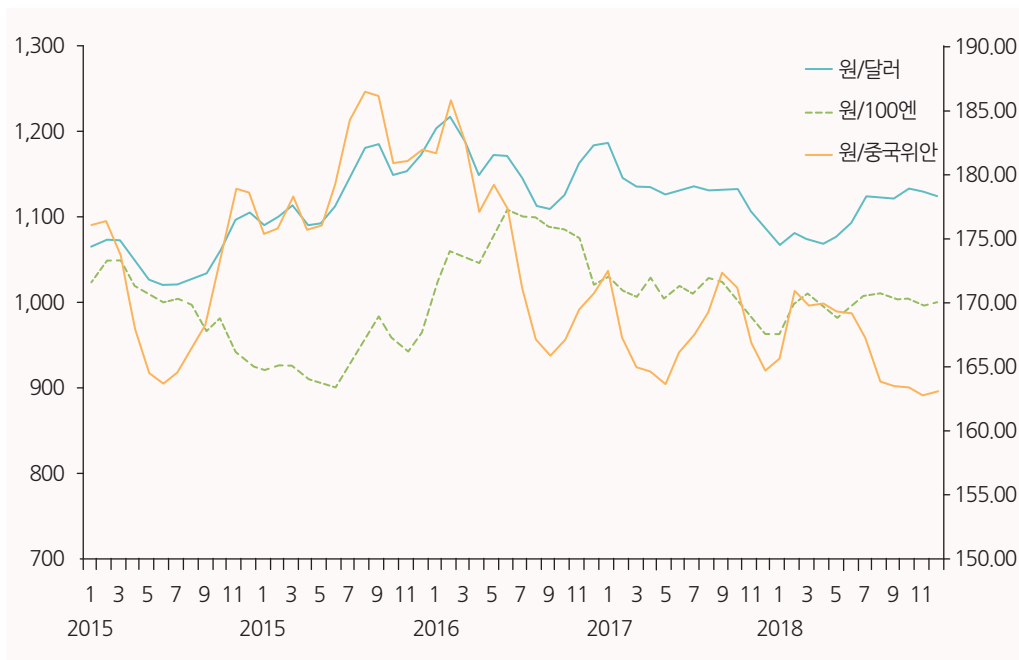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18년 하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25원으로 상반기 대비 49원 상승
 - 2018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6원 상승한 1,128원
 - 미국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투자심리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
- 2018년 하반기 원/위안 환율은 164원으로 상반기 대비 5원 하락
- 2018년 하반기 원/100엔 환율은 1,003원으로 상반기 대비 14원 상승

[그림 6. 환율동향]



자료: 한국은행





06 경제 전망

세계경제 전망
한국경제 전망
농업 전망

요약

- (세계경제전망) '19년 신흥개도국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 전망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통화긴축 기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개도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으로 2018년(3.3%) 대비 0.2%p 낮은 3.1%로 전망
- '19년 농업부문 생산액은 49조 4,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
- (경제성장) '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및 세계교역 둔화, 통상 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성장세 약화로 2018년(2.7%) 대비 0.1%p 낮은 2.6%로 전망
- (민간소비) 전년도 임금상승률에 대한 기저영향, 높은 가계부채 부담, 시중 금리 상승, 대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으로 2.6% 성장률 전망
- (설비투자) 기계 수주액 증가, 기업 영업 이익률 상승, 제조업 가동률 개선, 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1.4% 성장률 전망
- (농업)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투입재 비용이 전년 대비 0.6%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액이 1.5%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 감소 전망
- (경상수지) 글로벌 해운업 부진 및 국내 해운사 구조조정 등으로 적자 흐름은 지속되나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로 681억 달러 내외 흑자 전망
- (농축산물 무역수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액 증가, 2018년 축산물 수입량에 대한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곡물과 열대과일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농축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210.3억 달러 전망
- (소비자물가) '19년 소비자물가는 소비 증가세 둔화 및 교통·도시가스 등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유류세 및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농가교역조건) 영농광열비, 국제곡물, 사료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임 및 원료비 상승으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5% 상승하고,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2.3% 하락하여 농가교역조건은 전년 대비 2.8% 악화 전망
- (고용)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건설·제조업 인력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현장 중심 공무원 증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19년 실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06 경제 전망⁸⁾

●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 신흥개도국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통화긴축 기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개도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정치·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3.3%) 대비 0.2%p 낮은 3.1% 전망
- (미국)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나 미·중 통상 분쟁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세제 혜택 기저효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0.4%p 낮은 2.5% 전망
- (유로존) 고용상황 개선과 민간소비 중심의 내수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겠으나 글로벌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투자 및 수출 둔화, 브렉시트 협상 결과와 EU-미국 간 보호무역조치 갈등 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0.4%p 낮은 1.5% 전망
- (신흥국) 브라질 및 아세안 5개국은 완만한 소비 증가세와 정부지출 등으로 전년 대비 비슷 또는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금융불안 취약국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과 비슷한 4.4% 전망
- (중국) 미·중 통상 분쟁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은 높으나 개인소득세 개편 추진 및 수입관세 인하,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제도 시행으로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6.2% 전망

8)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과 김문희 연구원(kmh0618@krei.re.kr)이 농업전망 2019, 제1장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실질GDP 기준

구분	2016 (GI)	2017 (GI)	2018(추정)				2019(전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전 세계	2.6	3.3	3.7	3.0	3.2	3.3	3.5	2.9	2.9	3.1
선진국	1.7	2.3	2.3	2.2	2.2	2.2	2.0	2.0	1.9	2.0
미국	1.6	2.2	2.9	2.9	2.9	2.9	2.5	2.5	2.5	2.5
일본	0.6	1.9	0.9	0.8	0.8	0.8	1.1	0.9	0.8	0.9
유로지역	1.9	2.5	1.8	1.9	1.9	1.9	1.6	1.6	1.4	1.5
개도국	3.8	3.9	4.6	4.2	-	4.4	4.5	4.2	-	4.4
아프리카 ¹⁾	1.3	2.8	2.9	2.7	2.8	2.8	3.5	3.4	3.3	3.4
아시아 ²⁾	4.8	5.3	6.5	6.6	5.0	6.0	6.3	6.6	4.8	5.9
중국	6.7	6.9	6.6	6.5	6.6	6.6	6.2	6.2	6.3	6.2
중동&북아프리카	3.7	2.2	2.4	1.7	2.7	2.3	2.4	1.9	2.2	2.2
중남미	-0.2	1.9	1.1	0.6	1.5	1.1	2.0	1.7	1.9	1.9

주 1) Sub - Saharan Africa(사하라 이남 지역)

2) WB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임.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19), World Bank(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19),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January 2019)

▶ 환율

- (달러화)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간 차별성 완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달러화 약세 전망
- (달러/유로)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기대로 유로화 강세 전망
- (위안/달러)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되고,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약세 기조 이어질 전망

[표 2. 환율 동향과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전망)
환율	엔/달러	108.80	112.14	110.45	107.29
	달러/유로	1.11	1.13	1.18	1.19
	위안/달러	6.64	6.76	6.62	6.87

주: 2019년(전망)은 KEEI 2018. 12월 전망치, CERA 2018. 11월 전망치, EIA 2019. 1월 전망치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국제유가

- 이란의 원유수출 감소 및 베네수엘라의 생산 차질 등 지정학적 공급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세와 세계경기 둔화로 전년 대비 14.0% 낮은 배럴당 약 61달러(EIA) 수준 전망

[표 3. 국제 원유 가격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구분	2018	2019(전망)				
			1/4	2/4	3/4	4/4	평균
KEEI	Dubai	70	64	66	68	70	67
CERA	Dubai	70	74	74	71	73	73
EIA	Brent	71	58	60	61	63	61

주: 2019년(전망)은 KIEP 2019년 세계경제 전망 2018. 11월 전망치, Global Insight 2019. 1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January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국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19년 우리나라 경제는 재정조기집행과 EITC 개편 등의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및 세계교역 둔화, 통상 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 성장세가 약화되어 전년 대비 0.1%p 낮은 2.6% 전망(표 4)

- (민간소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소득기반 강화 정책은 실질구매력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년도 임금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 높은 가계부채 부담, 시중 금리 상승,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 예상되어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2.6% 전망
- (설비투자) 미국 금리인상 기조,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기업투자 심리는 위축되나 기계 수주액 증가, 기업 영업이익률 상승, 제조업 가동률 개선, 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1.4% 성장 전망
- (상품수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하고, 미·중 상호관세 부과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및 신흥국 경제 불안 가능성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3.2% 성장 전망
- (소비자물가) 소비증가세 둔화로 수요 압력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교통·도시가스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화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 하여 전년과 비슷한 1.5% 성장 전망
- (노동시장)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심리가 신정부의 일자리 예산 대폭확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추가채용 지원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실업률 하락 가능성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고용부담 확대 가능성으로 고용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률은 3.8% 전망
- (경상수지) 글로벌 해운업 부진과 국내 해운사 구조조정으로 운송수지의 적자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 등으로 2019년 경상수지는 681억 내외 전망

[표 4. 2019년 한국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8 ¹⁾	2019(전망)			
		한국은행 ²⁾	한국개발연구원 ³⁾	기획재정부 ⁴⁾	평균 ⁵⁾
경제성장	2.7	2.6	2.6	2.7	2.6
민간소비	2.8	2.6	2.4	2.7	2.6
설비투자	-1.7	2.0	1.3	1.0	1.4
건설투자	-4.0	-3.2	-3.4	-2.0	-2.9
상품수출	3.9	3.1	3.5	3.1	3.2
고용(실업률)	3.8	3.8	3.9	3.8	3.8
소비자 물가	1.5	1.4	1.6	1.6	1.5
경상수지(억 달러)	750	690	713	640	681

주 1) 한국은행 2019.1월 확정치임.

2) 한국은행 2019.1월 전망치임.

3) 한국개발연구원 2018.11월 전망치임.

4) 기획재정부 2018.12월 전망치임.

5)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2019년 전망치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 농업 전망

- (농업 생산액) 기상이변 및 가축질병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2019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 전망
 - (재배업) 초과공급에 따른 쌀 가격 하락과 콩 및 감자 가격 하락으로 곡물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하며, 채소류 또한 생산량 증가 예상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류, 특용·약용작물은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0%, 8.6% 증가 전망
 - (축잠업) 한육우, 돼지, 오리, 계란 생산액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폭이 생산량 증가폭보다 커 전년 대비 각각 1.4%, 7.9%, 6.9%,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닭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폭이 가격 하락폭보다 커 전년 대비 0.5% 증가 전망

[표 5.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전망]

단위: 십억 원, %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농업	29,760	48,170	50,189	49,442	2.6	4.2	-1.5
재배업	22,245	27,993	30,481	30,484	1.2	8.9	0.0
곡물류	10,171	8,378	10,762	10,261	-1.0	28.5	-4.7
채소류	6,721	11,032	11,776	11,612	2.6	6.7	-1.4
과실류	2,698	4,736	4,157	4,698	3.0	-12.2	13.0
특용·약용	553	1,716	1,640	1,780	6.1	-4.4	8.6
축잡업	7,515	20,178	19,708	18,958	5.3	-2.3	-3.8
한육우	1,836	4,664	4,897	4,827	5.0	5.0	-1.4
돼지	2,390	7,338	7,080	6,518	6.1	-3.5	-7.9
닭	858	2,377	2,260	2,270	5.5	-4.9	0.5
계란	778	2,100	1,421	1,395	5.4	-32.3	-1.8
젖소	1,091	2,128	2,105	2,100	3.6	-1.1	-0.2
오리	305	875	1,220	1,136	5.7	39.5	-6.9

주: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2년 책자부터 축산업에 양잠업을 합친 축잡업 생산액을 발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업부문 부가가치) 투입재 비용은 전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 생산액이 1.5%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 감소한 27조 2,620억 원 전망
 - (재배업)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투입재 가격 상승에도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총 투입재 비용이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0.2% 증가 전망
 - (축산업) 사료비와 가축비는 전년보다 하락하나, 사육 마릿수 증가영향으로 총 투입재 비용이 전년 대비 0.5% 증가하고, 축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3.8% 감소하여 전년 대비 7.0% 감소 전망

[표 6. 농업부문 부가가치¹⁾ 전망]

단위: 십억 원, %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농업	18,671 (62.7) ²⁾	26,708 (55.4)	27,908 (55.6)	27,262 (55.1)	1.9 -0.4%p	4.5 0.2%p	-2.3 -0.5%p
재배업	17,363 (78.1)	16,200 (57.9)	18,151 (59.5)	18,183 (59.6)	-0.4 -1.1%p	12.0 1.7%p	0.2 0.1%p
축산업	1,308 (17.4)	10,507 (52.1)	9,757 (49.5)	9,079 (47.9)	11.6 1.8%p	-7.1 -2.6%p	-7.0 -1.6%p

주 1)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이며, 부대서비스는 제외됨.

2) ()는 부가가치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축산물 무역수지)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나 규모가 큰 품목의 수입액이 0.6%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비슷한 210.3억 달러 내외 전망
 - (수입) 2018년 축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겠으나 곡물과 열대과일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275.8억 달러 전망
 - (수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65.5억 달러 전망

[표 7. 농축산물 무역 동향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총 수입액(A)	54.2	252.0	274.2	275.8	8.4	8.8	0.6
수입량	21,191	34,624	35,972	36,540	2.6	3.9	1.6
7대 곡물 ¹⁾	13,969	15,909	15,960	16,069	0.7	0.3	0.7
5대 채소 ²⁾	90	324	219	217	7.0	-32.5	-0.9
과일	148	865	882	906	9.7	1.9	2.7
6대 과일 ³⁾	5.1	48.5	55.7	56.5	12.6	14.7	1.5
오렌지·열대과일	143	817	827	850	9.6	1.2	2.8
5대 축산물 ⁴⁾	88	1,021	1,215	1,182	13.8	19.0	-2.7
총 수출액(B)	13.9	63.9	64.1	65.5	8.4	0.3	2.2
수출량	1,217	3,124	3,203	3,241	5.1	2.5	1.2
무역수지적자(A - B)	40.3	188.1	210.1	210.3	8.4	11.7	0.1

주 1) 7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2) 5대 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3) 6대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4) 5대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

자료: GTI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가교역조건) 영농광열비, 국제곡물, 사료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임 및 원료비 상승으로 농업구입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하고,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2.3% 하락하여 농가교역조건은 전년 대비 2.8% 악화 전망

[표 8.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및 전망 (2015년=100)]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농가판매가격지수(A)	67.8	107.6	107.9	105.4	2.5	0.3	-2.3
농업구입가격지수 ¹⁾ (B)	62.6	96.3	98.2	98.7	2.3	2.0	0.5
농가교역조건 ²⁾ (A/B×100)	108.2	111.7	109.9	106.8	0.2	-1.7	-2.8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실제 농업관련 비용으로 투입재, 노임, 임차료, 가축구입비, 사료비를 가중평균한 지수임.

2)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업구입가격지수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로 산출되는 농업부문 패리티지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경지면적) 재배업 수익률 감소세로 2019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 전망
 - 2019년 농가호당 경지면적 전년 대비 0.5% 증가,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전년 대비 0.8% 증가 전망

[표 9.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경지면적(천 ha)	1,910	1,621	1,604	1,591	-0.9	-1.0	-0.8
농가호당 경지면적(ha)	1.35	1.56	1.56	1.57	0.7	0.4	0.5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43.4	66.9	67.3	67.9	2.3	0.6	0.8
경작가능면적(천 ha)	1,924	1,580	1,564	1,551	-1.0	-1.0	-0.8
재배면적(천 ha)	2,118	1,641	1,633	1,618	-1.3	-0.5	-0.9
경지이용률(%)	110.1	103.9	104.4	104.3	-0.3%p	0.5%p	-0.1%p

주: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경작가능면적 × 100으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재배면적) 특용·약용 작물을 제외한 채소류, 과실, 곡물류 재배면적 감소 전망
 - 곡물류(쌀 포함) 재배면적 전년 대비 0.9% 감소 전망

- 2018년산 양파와 마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며,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도 각각 3.5%, 2.0%, 0.6% 감소 전망
- 과수 재배면적 전년 대비 0.3% 감소 전망
- 특용·약용 작물 재배면적은 2018년 유지류(참깨, 들깨, 땅콩)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나 기타 작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 전망

[표 10. 부류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 ha, %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전체 재배면적	2,118	1,641	1,633	1,618	-1.3	-0.5	-0.9
곡물류	1,331	920	924	916	-1.9	0.5	-0.9
채소류	350	272	282	275	-1.3	3.7	-2.6
엽채류	68	47	48	46	-1.9	1.2	-3.5
근채류	43	25	26	25	-2.8	2.6	-2.0
조미채소류	147	98	109	104	-2.1	11.6	-5.1
과채류	71	42	42	42	-2.7	0.3	-0.6
과수	173	167	165	164	-0.2	-1.3	-0.3
특용·약용	115	96	81	83	-0.9	-16.2	2.6
기타 작물	149	186	181	180	1.2	-2.8	-0.7
사료작물	33	74	69	67	4.3	-6.7	-1.9

주: 부류별 재배면적은 통계청 농산물 재배면적 조사 통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가축 사육마릿수) 2019년 전체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91.9백만 마리 전망
 - (우제류) 소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증가폭(2.3%)이 도축 마릿수 증가폭(1.0%)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 사육 마릿수도 모돈이 늘어 전년보다 1.4% 증가하겠으나, 젖소는 원유 감산 기조 유지로 0.6% 감소 전망
 - (가금류) 육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증가로 전년 대비 3.5% 증가,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병아리 입식 증가로 1.3% 증가, 오리농 종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1% 증가 전망

[표 11. 사육 마릿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마릿수, %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전체	95.0	171.1	187.4	191.9	3.1	9.5	2.4
우제류	10.5	14.7	14.9	15.1	1.8	0.8	1.4
소	2.4	3.0	3.1	3.1	1.3	2.4	1.8
젖소	0.5	0.4	0.4	0.4	-1.4	-0.6	-0.6
돼지	7.6	11.4	11.4	11.5	2.1	0.4	1.4
가금류	84.5	156.4	172.5	176.9	3.3	10.3	2.5
육계	35.5	87.4	92.5	95.7	4.9	5.8	3.5
오리	3.2	6.6	8.5	8.7	4.0	27.7	2.1
산란계	45.8	62.4	71.6	72.5	1.6	14.7	1.3

주: 가축통계 공표를 위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사육 마릿수 통계자료는 이력제 자료로 대체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농협(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19년) 곡물류 자급률은 2018년산 쌀 생산량이 감소(0.7%)하나, 콩과 감자 생산량이 각각 3.5%, 9.4% 증가하여 전년 대비 0.3%p 상승한 48.5%로 전망, 육류 자급률은 수입량이 전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돼지고기 국내 공급 증가에 따른 재고 누적량 소비로 전년 대비 0.4%p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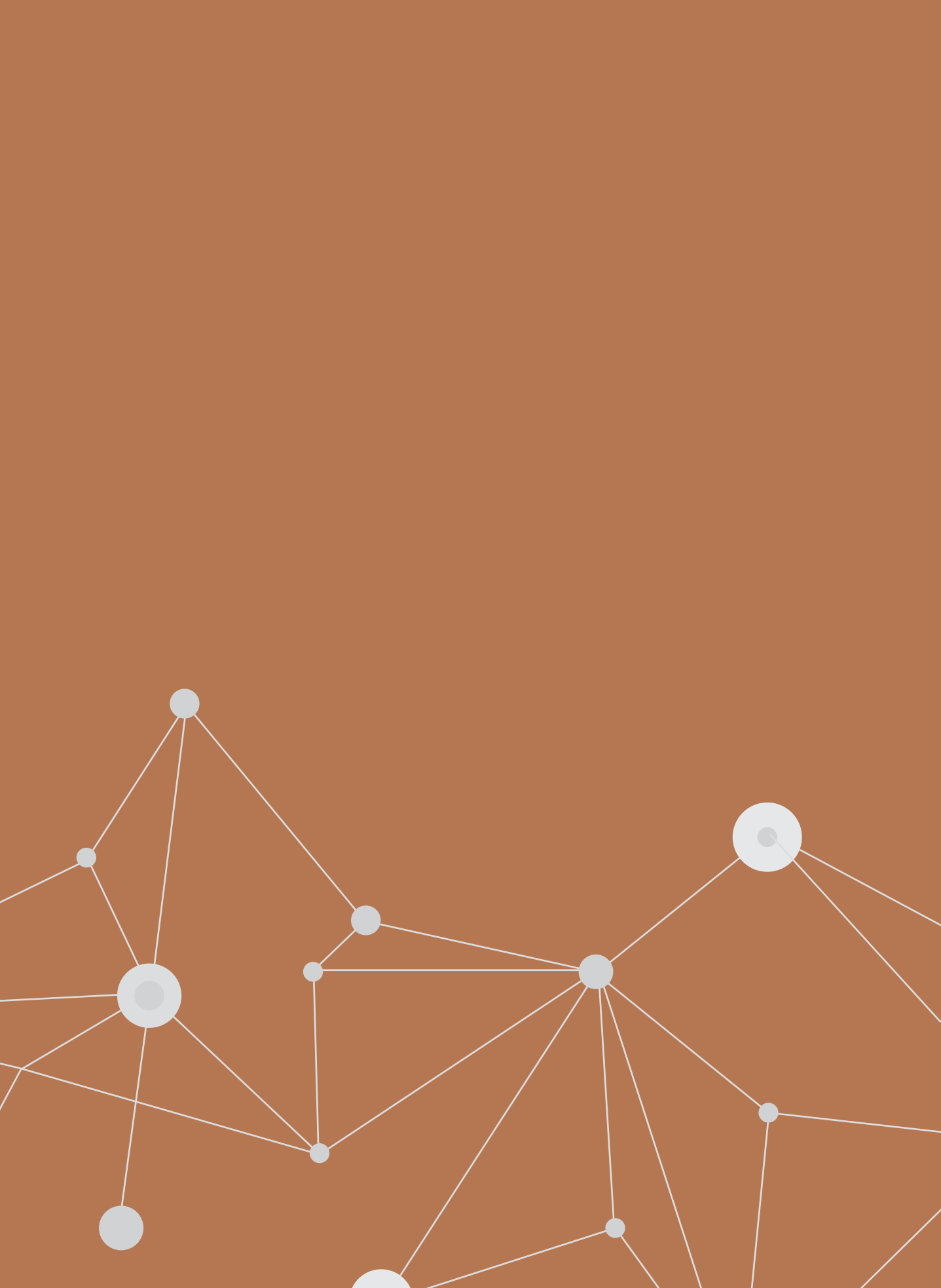
[표 12. 자급률 동향 및 전망]

단위: %, %p

구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변화율		
				2019	17/98	18/17	19/18
전체 자급률(%)	83.5	72.3	72.5	72.5	-0.6	0.2	0.0
곡물류 자급률(%)	57.6	48.9	48.2	48.5	-0.5	-0.7	0.3
육류 자급률(%)	89.2	66.7	65.7	65.3	-1.2	-1.0	-0.4

주: 자급률은(국내 생산량/소비량 × 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 및 전체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07 2019 농식품 예산 현황

농식품부 2019년 예산 분석
회계·기금의 구성 및 예산
사업부문별 예산
농림투융자사업 예산

요약

■ 총괄

- 2019년 국가 전체 예산은 470.5조 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
- 2019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4조 6,5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식품 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4조 6,4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
 - 사업부문별로는 총예산대비 '농업생산' 64.2%, '연관산업' 18.5%, '농촌개발 및 복지' 11.8%, '기술개발' 1.5%, '기타' 1.0% 투입
 - '농업생산'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으나, '농촌개발 및 복지'와 '연관산업'은 각각 4.9%, 2.5% 증가
- 2019년 농식품부 일반지출은 회계 9조 4,757 기금 5조 1,839억 원으로 구성
 - 회계 일반지출은 농특회계 등 예산 증가로 전년대비 10.4% 증가
 - 기금 일반지출은 직불기금 등의 예산 감소로 전년대비 12.4% 감소

■ 농식품부 투융자사업 예산

- 2019년 농식품부 보조금은 6조 6,6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이며, 융자금 예산은 2조 9,77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
- 사업부문별로는 '농업생산'에 보조금 예산의 68.3%, 융자 예산의 56.3% 투자
 - '연관산업'에는 보조금의 10.5%, 융자금의 43.3% 투입
 - '농촌개발 및 복지'에는 보조금의 20.6% 투입
- 보조금 예산은 전년대비 19.8% 감소하였고, 융자 예산은 전년대비 3.6% 증가
 - '농업생산' 보조금은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융자금은 4.4% 증가
 - '연관산업' 보조금은 전년대비 6.8%, 융자금은 2.6% 증가
 - '농촌개발 및 복지' 보조금은 전년대비 15.8% 감소
- 보조금은 민간이전이 2조 3,239억 원이고 자치단체이전이 4조 3,422억 원
 - 민간이전 금액은 전년대비 44% 감소하였으나 자치단체이전 금액은 4.9% 증가

07 2019 농식품 예산 현황

● 농식품부 2019년 예산 분석

▶ 총예산

- 2019년도 국가 전체 예산 총지출 규모는 470.5조 원으로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9.7% 증가
 - 보건·복지·고용 (162.2조원), 일반·지방행정(77.9조원), 교육(70.9조원), 국방(46.7조원), R&D(20.4조원), 공공질서·안전(20.0조원), 농림·수산·식품(19.9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6조원), SOC(18.5조원), 환경(7.1조원), 문화·체육·관광(7.1조원), 외교·통일(5.1조원) 순임.
 -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초연금 인상(9.1→11.5조 원)과 아동수당 확대(0.7→1.9조 원) 등으로 전년대비 17.6조 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신규사업 억제, 완공 위주의 투자 등의 이유로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 편성됨.

[표 1. 2019년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 원, %

구분	2018(A)	2019(B)	증감	
			(B-A)	(B-A)/A
정부 총지출	428.8	470.5	41.7	9.7
1. 보건·복지·고용	144.6 (19.2)	162.2 (23.5)	17.6 (4.2)	12.1 (22.0)
2. 교육	64.2 (49.5)	70.9 (55.7)	6.7 (6.2)	10.5 (12.5)
3. 문화·체육·관광	6.5	7.1	0.6	10.1
4. R&D	19.7	20.4	0.7	3.7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2.3	14.3
6. SOC	19.0	18.5	-0.5	-2.3
7. 농림·수산·식품	19.7	19.9	0.2	1.1
8. 환경	6.9	7.1	0.2	3.6
9. 국방	43.2	46.7	3.5	8.2
10. 외교·통일	4.7	5.1	0.4	7.5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0.9	4.9
12. 일반·지방행정	69.0 (46.0)	77.9 (52.8)	8.9 (6.8)	12.9 (14.8)

자료: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총예산은 14.7조로 전년대비 1.1%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예산안은 청년 후계농 육성, 재해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됨.
 -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농식품부 총예산 평균 증감율은 1.1%
- 국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총예산 비중은 2015년 3.7%, 2017년 3.6%, 2019년 3.1%로 감소하는 추세

[표 2. 농식품부 및 농식품분야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5	3,754,000	5.5	193,065	3.1	140,431	3.0
2016	3,864,000	2.9	193,946	0.5	143,681	2.3
2017	4,005,000	3.6	196,221	1.2	144,887	0.8
2018	4,288,000	7.1	197,256	0.5	144,996	0.1
2019	4,705,000	9.7	200,303	1.5	146,596	1.1
2015-2019 평균 증감률	5.8%		0.9%		1.1%	

주: 농식품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식약처(식품안전) 예산 및 기금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회계·기금의 구성 및 예산

▶ 개괄

- 농식품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경우 1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됨.
 - － 일반회계: 농식품부의 일반적인 재정집행 및 관련부서 운영을 위한 회계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과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구성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 추진지원을 위하여 설치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및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군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로 운영

–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양곡관리법에 따라 곡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설치

■ 농식품부 소관 기금의 경우 7개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용되는 특정 자금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음. 따라서 엄격히 통제되는 예산보다는 재정 운용이 탄력적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기금

–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기금):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산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기금

–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축산물 유통 개선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하 직불기금):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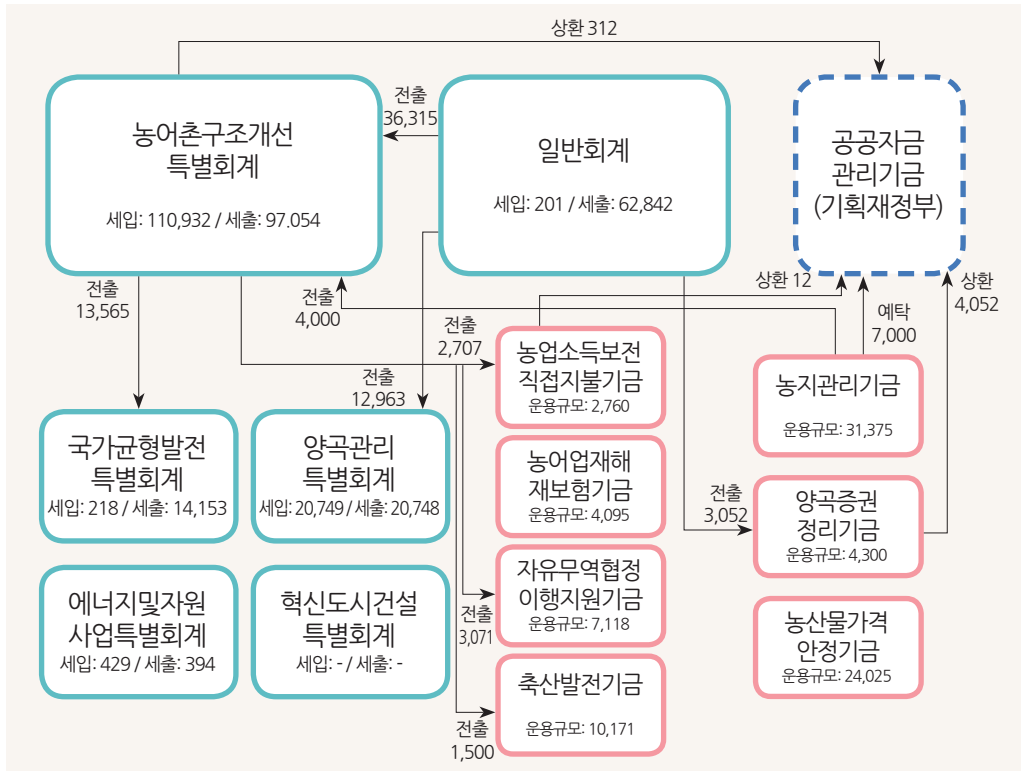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지행지원기금(이하 FTA기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재해기금):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양곡기금): 양곡관리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양곡증권 원리금 상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그림 1. 농식품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구성]

단위: 억 원



주: 총계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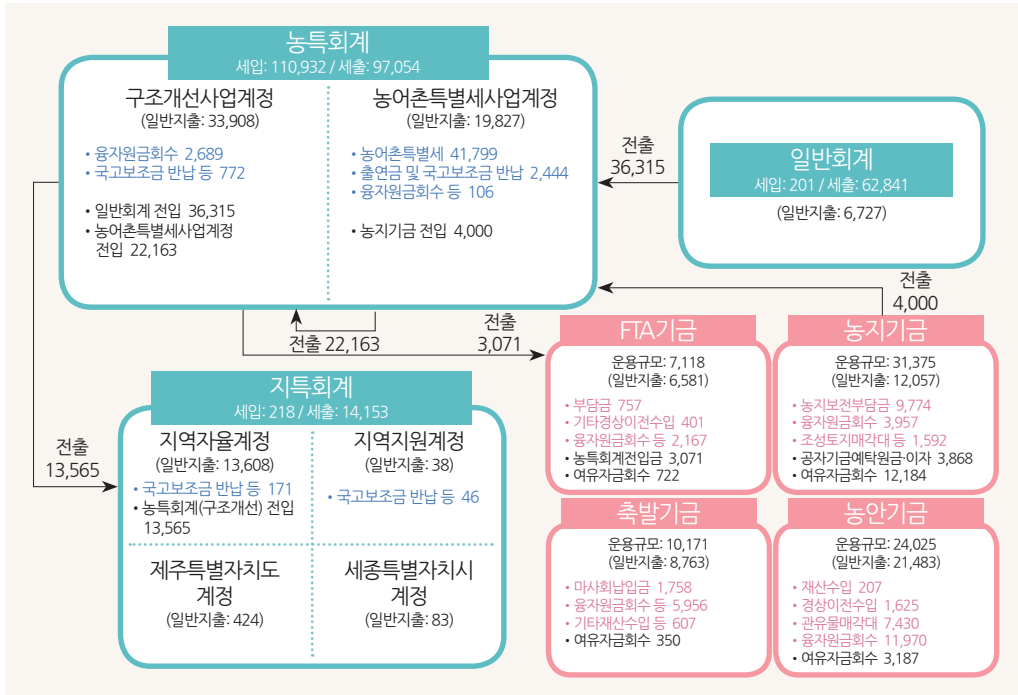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농식품부의 2019년 예산안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6,315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2,963억 원이 전출되며,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3,052억 원이 전출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3,565억 원이 전출되고 축산발전기금으로 1,500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3,071억 원이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12억 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함.
-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 4,000억 원이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000억 원을 예탁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양곡증권 정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각각 12억 원, 3,000억 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함.

[그림 2. 농식품부 소관 주요 회계·기금 구성 주요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기금의 총 운용규모⁹⁾는 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나, 직불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 운용 규모는 증가

- 직불기금 8,260억 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기금 총 운용규모는 2,715억 원 감소
- 전년대비 농안기금(1%), 농지기금(22%), 재해보험(24%) 등은 증가

9) 기금의 운용규모는 수입 측면에서는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의 합이며, 지출 측면에서는 일반지출,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의 합임. 일반지출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합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산'금액임.

[표 3. 기금 운용규모 변화추이]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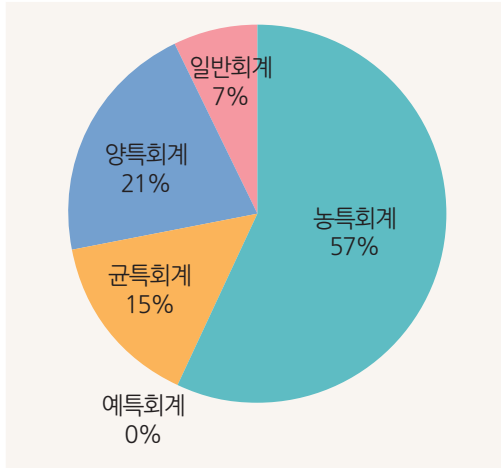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2015-2019 평균 증감률
농안기금	28,527	28,865	28,850	23,739	24,025	1	-4
농지기금	13,424	17,740	20,703	25,798	31,375	22	24
축발기금	11,498	13,617	11,660	10,529	10,171	-3	-3
직불기금	5,020	8,423	15,545	11,020	2,760	-75	-14
FTA기금	7,024	6,986	6,974	7,060	7,118	1	0
재해기금	1,805	2,126	2,271	3,305	4,095	24	23
양곡기금	7,034	10,191	17,808	5,108	4,300	-16	-12
합 계	74,332	87,948	103,811	86,559	83,844	-3	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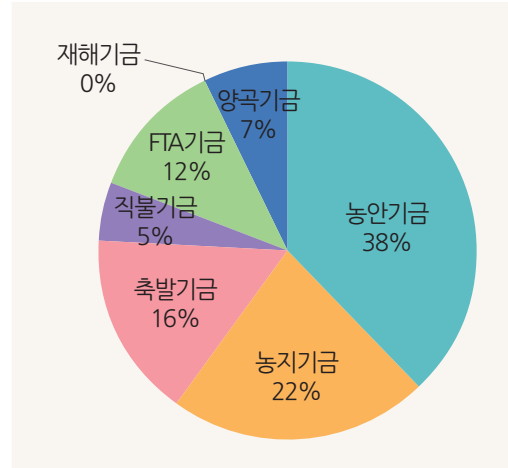
▶ 회계·기금 사업 예산 현황

- 2019년 농식품부 총 일반지출 14조 6,596억 원은 예산 9조 4,757억 원과 기금 5조 1,839억 원으로 구성됨.
 - 회계 일반지출 규모별로는 농특회계가 5조 3,735억 원, 양특회계 1조 9,748억 원, 균특회계 1조 4,153억 원 순임.
 - 기금 일반지출 규모별로는 농안기금이 2조 1,483억 원, 농지기금 1조 2,057억 원, 축발기금 8,763억 원, FTA기금 6,581억 원, 직불기금 2,748억 원 순임.

[회계별 예산규모(2019)]



[기금별 예산규모(20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2019년도 예산 일반지출은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으나, 기금 일반지출은 전년대비 12.4% 감소
 - 회계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농특회계의 예산은 10.2% 증가함.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신규사업 13개 모두 농특회계에 포함된 것에서 기인함.
 - 기금 중에서는 농특회계 전입금이 감소한 직불기금을 포함하여 축발기금, 농안기금 등의 일반지출 감소하였으나, 재해기금은 예산 규모가 증가함. 대부분 기금의 단위사업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표 4. 예산 및 기금 일반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18예산		'19예산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예산	단위사업수	예산	단위사업수	
예산	85,794	80	94,757	102	10.4
일반회계	6,562	23	6,727	22	2.5
농특회계	48,752	40	53,735	59	10.2
에특회계	453	2	394	3	-13.0
균특회계	13,444	12	14,153	15	5.3
양특회계	16,583	3	19,748	3	19.1
예산	59,202	42	51,839	43	-12.4
농안기금	21,497	10	21,483	10	-0.1
농지기금	10,832	8	12,057	10	11.3
축발기금	9,353	8	8,763	9	-6.3
직불기금	11,008	4	2,748	3	-75.0
FTA기금	6,406	9	6,581	8	2.7
재해기금	106	3	206	3	94.3

주: 단위사업수는 성과관리대상 및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수를 합한 개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2019년도 예산과 기금의 보조금, 융자금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민간과 지자체로 이전되는 보조금은 회계 5조 6,879억 원, 기금 9,782억 원임.
- 지자체로 이전되는 보조금 규모는 회계 3조 7,172억 원, 기금 6,251억 원임. 회계의 경우, 농특회계 농특세계정으로 지원하는 직불제 사업, 지역개발사업,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이 주된 지자체 보조 예산임.
- 민간으로 이전되는 보조금 규모는 회계 1조 9,708억 원, 기금 3,531억 원임. 회계에서는 농특회계 구조개선계정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융자금 규모는 회계 518억 원, 기금 2조 9,261억 원임. 기금별 융자금규모는 농안기금 1조 3,049억 원, 농지기금 8,968억 원, 축발기금 4,580억 원 순임.

[표 5. 예산·기금 보조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보조금	지자체	민간	용자
합계	66,662	43,422	23,239	29,779
예산 합계	56,879	37,172	19,708	518
일반회계	1,763	-	1,763	-
농특회계	40,438	22,570	17,869	425
구조개선계정	26,365	10,839	15,526	425
농특세계정	14,073	11,731	2,342	-
균특회계	14,152	14,152	-	-
양특회계	254	181	73	-
에특회계	273	269	3	93
예산 합계	9,782	6,251	3,531	29,261
농지기금	108	-	108	8,968
축발기금	3,923	2,219	1,704	4,580
FTA기금	3,654	3,499	155	2,664
농안기금	2,098	533	1,565	13,049
직불기금	-	-	-	-
재해기금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 사업부문별 예산

▶ 전체 예산

- 2019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4조 6,596억 원으로 재정사업 투입 예산은 총 14조 6,480억 원, 성과관리 대상 예산은 총 14조 1,959억 원임.
 - 재정사업과 성과관리 대상 예산 모두 전년대비 각각 1% 증가

[표 6. 농식품부 사업부문별 예산]

단위: 억 원, %

유형	세부 유형	2018	2019	증감률	성과관리대 상 예산 비중 (2019)
재정사업 예산	합계	144,996	146,480	1.0	
성과관리 대상 예산	합계	140,555	141,959	1.0	
농업 생산	합계	94,090	93,974	-0.1	64.2
	생산기반	27,018	28,671	6.1	
	식량작물	18,204	21,543	18.3	
	원예특작	2,561	2,710	5.8	
	축산	13,940	13,593	-2.5	
	경영안정	30,742	25,551	-16.9	
	교육 및 훈련	1,028	1,295	25.9	
	기타	597	612	2.6	
연관 산업	합계	26,381	27,034	2.5	18.5
	투입재	3,597	3,514	-2.3	
	유통	15,010	15,053	0.3	
	식품	7,582	7,556	-0.3	
	기타 산업	193	911	372.7	
기술개발	기술개발	2,110	2,145	1.7	1.5
농촌개발 및 복지	농촌개발 및 복지	16,545	17,356	4.9	11.8
기타	합계	1,430	1,450	1.4	1.0
	국제협력·해외농업	1,000	1,028	2.7	
	정보화	371	364	-2.0	
	행정·청사	58	59	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전체 예산 중 ‘농업생산’을 제외한 ‘연관 산업’, ‘기술개발’, ‘농촌개발 및 복지’, ‘기타’ 부문의 예산이 모두 증가
 - ‘농업생산’과 ‘연관산업’ 부문의 예산은 각각 9조 3,974억 원, 2조 7,034억 원으로 두 부문이 전체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함.
 - ‘농업생산’ 부문에서는 식량작물,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대부분 사업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축산’, ‘경영안정’ 부문의 예산 감소로 농업 생산 부문의 전체 예산이 소폭 감소함.
 - ‘연관산업’ 부문에서는 투입재, 식품 등의 유형에서 예산이 감소한 반면, 유통과 기타 산업 부문은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타 부문은 농업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이 약 4.7배 증가함.

○ 농림투융자사업 예산

▶ 보조형태별 보조금 예산 현황

- 2019년의 보조금 예산은 6조 6,662억 원으로 농식품부 재정사업 전체 예산의 45.5%를 차지함.
 - 2018년 보조금 예산은 8조 3,1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 차지하였음.
- 농식품부는 농업인경영체, 영농조합, 농협 등 민간(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조 대상에 따라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구분하며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음. 경상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고 자본보조는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성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임.
- 민간보조는 전년대비 44% 감소한 2조 3,239억 원이며, 자치단체보조는 전년대비 5% 증가한 4조 3,422억 원임.

[표 7. 보조형태별 보조금 예산]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증감률	비중 (2019)
농식품부 재정사업 예산	140,555	146,480	1.0	-
보조금 합계	83,124	66,662	-19.8	45.5
민간보조	41,729	23,239	-44.3	15.9
(경상보조)	28,744	13,278	-53.9	
(자본보조)	12,948	9,961	-23.1	
자치단체보조	41,402	43,422	4.9	29.6
(경상보조)	20,600	21,378	3.8	
(자본보조)	20,802	22,045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사업부문별 보조금 예산 현황

[표 8. 사업부문별 보조금 예산]

단위: 억 원, %

유형	세부 유형	2018	2019	증감률	비중 (2019)
전체 보조금	합계	82,914	66,662	-19.8	-
농업 생산	합계	59,894	45,548	-24.0	68.3
	생산기반	19,292	16,477	-14.6	24.7
	식량작물	1,715	2,140	24.8	
	원예특작	1,416	1,600	13.0	
	축산	6,326	6,494	2.7	
	경영안정	30,327	17,946	-40.8	
	교육 및 훈련	409	508	24.0	
	기타	409	383	-6.3	
연관 산업	합계	6,550	6,997	6.8	10.5
	투입재	2,543	2,542	-0.1	
	유통	1,451	1,493	2.9	
	식품	2,367	2,254	-4.8	
	기타 산업	189	708	275.4	
기술개발	기술개발	19	18	-4.0	2.5
농촌개발 및 복지	농촌개발 및 복지	16,329	13,742	-15.8	20.6
기타	합계	333	357	7.2	0.5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	198	220	11.4	
	정보화	135	136	1.0	
	행정·청사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사업부문별로 보면 5개 부문 중 ‘농업생산’의 보조금이 4조 5,5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기술개발’이 18억 원으로 가장 적음.
 - 보조금 예산 중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로 가장 높고 ‘농촌개발 및 복지’가 20.6%로 두 번째로 높으며 두 부문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85% 이상을 차지함.
 - 기술개발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대부분으로 보조사업의 규모는 미미함¹⁰⁾.
- (농업생산) 2019년 보조금 예산은 총 4조 5,548억 원이며 전년대비 감소함.
 -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형이 각각 1억 7,946억 원, 1조 6,477억 원으로 농업 생산 부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경영안정 사업에는 직불제,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다음으로는 축산 6,494억 원, 식량작물 2,140억 원, 원예특작 1,60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식량작물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는데 정부양곡매입비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연관산업) 2019년 보조금 예산은 6,997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유통, 기타 산업 부문의 예산이 각각 1,493억 원, 708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투입재, 식품 산업의 예산은 감소함.
 - 기타 산업 부분의 경우 스마트 농업 육성,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의 신규사업 지원으로 인하여 예산이 전년대비 약 3.7배 증가함.
 - 가장 비중이 큰 투입재 부문 예산은 2,542억 원이며, 관련 사업으로 종자, 품종,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이 해당됨.
- (농촌개발 및 복지) 2019년 보조금 예산은 총 1조 3,742억 원으로 전체 보조금 예산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8년의 1조 6,329억 원에 비해 15.8% 감소함.
- (기타) 2019년 보조금 예산은 357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해외 농업이 220억 원, 정보화가 136억 원을 차지함.

10) '19년 농촌진흥청 예산은 9,404억 원으로 농식품 기술개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사업부문별 융자금 예산 현황

[표 9. 사업부문별 융자금 예산]

단위: 억 원, %

유형	세부 유형	2018년	2019년	증감률	비중 (2019)
전체 예산	합계	28,755	29,779	3.6	
농업 생산	합계	16,062	16,765	4.4	56.3
	생산기반	7,406	8,849	19.5	
	식량작물	-	-	-	
	원예특작	1,144	1,110	-3.0	
	축산	7,227	6,521	-9.8	
	경영안정	285	285	0.0	
	교육 및 훈련	-	-	-	
	기타	-	-	-	
연관 산업	합계	12,567	12,895	2.6	43.3
	투입재	-	-	-	
	유통	7,844	8,085	3.1	
	식품	4,723	4,810	1.8	
	기타 산업	-	-	-	
기술개발	기술개발	-	-	-	-
농촌개발 및 복지	농촌개발 및 복지	-	-	-	-
기타	합계	126	120	-5.0	0.4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	126	120	-5.0	
	정보화	-	-	-	
	행정·청사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 
- 2019년 농식품부 전체 융자 예산은 2조 9,779억 원으로 2018년의 2조 8,755억 원보다 3.6% 증가함.
 - 사업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1조 6,765억 원으로 전체 융자 예산 중 56.3%를 차지하고 '연관 산업' 1조 2,895억 원, '기타' 120억 원 순임.
 - 융자 예산 중 99% 이상이 '농업생산'과 '연관산업'에 투입되고 있음.
 - (농업생산) 2019년 융자 예산은 1조 6,765억 원이며 전년대비 4.4% 상승함.
 - 생산기반 부문이 8,849억 원, 축산 부문이 6,52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생산기반 관련 사업 중 융자지원이 비중이 높은 사업은 주로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이며, 축산 부문은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가축방역, 축사시설 현대화 등임.
 - (연관산업) 2019년 융자 예산은 1조 2,89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함.
 - 유통 부문의 예산이 8,08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산지조직의 조직화, 규모화 등을 지원하는 산지유통종합자금이 주요 사업임.
 - (기타) 2018년 융자 예산은 120억 원으로 전액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 부문에 투입됨.

08 부록

2019년도 농식품부 사업부문
분류표

08 부록

● 2019년도 농식품부 사업부문 분류표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농업 생산	경영 안정	농업재해보험(구조계정)	농업재해보험	326,046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55,740
		재해대책	재해대책비	55,764
			재해대책비(용자)	28,500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300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	재보험금	20,000
		정책금융보험관리	농업자금이차보전	420,922
		농가소득보전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802,770
			경영이양직불	47,179
			조건불리지역직불	54,647
			밭농업직불제	207,790
		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	직불제이행점검	12,331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53,300
		농가소득보전(직불,지역경관)	경관보전직불	8,356
		직접피해지원(FTA기금)	폐업지원	102,000
			피해보전직불	100,000
		농촌정착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1,372
		농가소득보전(직불,친환경)(농촌계정)	친환경농업직불	38,110
	원에 특작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	19,418
		스마트농업육성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28,000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모델개발	3,000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농업 생산	원예 특작	원예산업경쟁력강화(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	59,307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55,080
			원예시설현대화	29,680
			원예시설현대화(용자)	15,10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2,74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용자)	12,024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 (용자계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용자)	9,332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 (투자계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27,273
	식량 작물	식량생산유통지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340
			들녘경영체육성	13,702
		농산물유통개선(농특)	발작물산업육성	10,950
		양곡매입 및 관리	수입양곡대	379,567
			정부양곡매입비	1,105,102
			쌀소비활성화	6,400
			정부양곡관리비	473,715
	생산 기반	농업시설개선(농특)	농촌용수관리	51,092
			수리시설개보수	558,018
		다목적 용수개발	농촌용수개발	350,200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	160,995
		농업기반정비(제주)	농업기반정비(제주)	16,840
		농업기반정비(세종)	농업기반정비(세종)	1,000
		경영화생지원	경영화생지원농지매입(용자)	290,000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맞춤형농지지원(용자)	464,928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농업 생산	생산 기반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42,000
			대단위농업개발(농특)	99,500
		대단위농업개발(농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153,642
			새만금지구(유지관리및부대사업)	20,000
			대단위농업개발(농지)	52,000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농지연금(용자)	129,929
		재해예방(농특)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3,463
			한발대비용수개발	11,700
			배수개선	256,750
	축산	가축검역(농특)	살처분보상금	60,000
			가축방역	18,147
			시도가축방역	130,891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	13,70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3,02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용자)	10,011
		가축방역(축발)	가축위생방역지원	51,628
		동물보호및복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4,109
		동축산물검역검사	동축산물검역검사	9,748
		동축산물검역검사	축산식품안전관리	1,910
		축사시설현대화(FTA)	축사시설현대화	49,019
			축사시설현대화(용자)	164,150
		축산기술보급	가축개량지원	46,369
			가축개량지원(용자)	6,000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수급관리	80,150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농업 생산	축산	축산물수급관리	축산자조금	26,000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1,666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1,731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축산물HACCP지원	1,650
			도축검사운영	17,941
		축산업경쟁력제고(FTA)	원유소비활성화(용자)	10,000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용자)	10,000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	53,850
			말산업육성지원	31,640
			말산업육성지원(용자)	1,950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용자)	336,150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1,500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용자)	1,500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1,040
		친환경축산(축발)	가축분뇨처리지원	35,050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48,29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76,57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	10,807
		축산물품질관리(축발)	축산물품질관리	43,078
	교육 및 훈련	농업인교육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48,520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	25,213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2,400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한국농수산대학기본경비 (책임운영, 총액인건비대상)	385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농업 생산	교육 및 훈련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한국농수산대학기본경비 (책임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3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42,708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수입대체)	297
	기타	농업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예특)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2,823
		직접피해지원(FTA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630
		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	2,080
		농업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3,190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조성	500
		농업농촌알리기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5,450
			농업농촌알리기	1,200
		정책금융보험관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6,820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기관 운영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17,341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균특)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3,858
연관 산업	투입재	농업기계장비	농기계임대	43,500
		종자수급조절	종자수매.공급	60,223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188,752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050
		농기자재산업육성	농기자재수출활성화	931
		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	종자산업기반구축	9,56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500
		종자산업육성(농특)	품종심사및재배시험	15,870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	23,299
			원원종및원종생산	5,692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연관 산업	유통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농안기금)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16,082
			비축지원	618,880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3,466
			자조금지원	8,130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562,760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96,851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용자)	13,758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0,318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289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0,959
			농산물마케팅지원	8,254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2,400
		농산물유통개선(농특)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23,50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농특)	농업관측	8,520
		농산물소비활성화 및 식생활개선(농특)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6,781
		소비자유통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3,215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38,300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7,677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22,500
	식품 산업 및 안전	한식및외식산업육성	푸드서비스 선진화	1,350
		한식및외식산업육성(농안)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9,858
		식품산업기반조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1,378
		농식품수출촉진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2,700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연관 산업	식품 산업 및 안전	농식품수출촉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7,578
			수출인프라강화	43,106
		농식품수출촉진(농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338,642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1,523
		농산물유통개선(농특)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4,500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융자)	8,36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20,636
		식품산업육성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9,928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806
		식품산업육성(농안)	전통발효식품육성	8,400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30,000
		농산물안전성관리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1,847
		농산물안전성관리	농산물안전성조사	23,590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4,543
			농산물원산지관리	17,012
		농산물품질관리(농특)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9,1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1,501
	기타 산업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균특)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1,000
		반려동물산업육성	반려동물산업육성(자율)	9,450
			반려동물산업육성(제주)	30
		농식품창업지원(FTA기금)	농식품모태펀드출자	20,000
		농생명자원사업육성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710
			도시농업활성화	1,600
		스마트농업육성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12,190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연관 산업	기타 산업	스마트농업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16,400
			스마트팜 실증단지	19,227
농촌 개발 및 복지	농촌 개발 농촌 복지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	농업인안전재해보험	71,202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4,008
		농가소득안정(복지)(농특)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53,52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21,192
		농촌형교통모델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8,74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3,789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8,70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1,785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5,482
		일반농산어촌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901,412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18,335
		농촌지역개발(농특)(농촌계정)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8,536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2,638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31,37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6,200
			농촌공간계획수립	1,000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6,420
			농촌휴식시설활용창업지원	3,000
			농촌휴식시설활용창업지원	3,000
		농촌복지증진	취약농가인력지원	9,96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1,500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13,995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2,776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기술 개발	기술 개발	농식품기술개발(농특)	Golden Seed 프로젝트(R&D)(농림부)	26,199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R&D)(농림부)	6,355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R&D)	9,354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23,903
			기술사업화지원(R&D)	7,181
		농식품기술개발(농특)	첨단생산기술개발(R&D)	28,505
			수출전략기술개발(R&D)	13,010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R&D)	7,794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13,581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R&D)	2,843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R&D)	4,321
			농촌기반기술연구(R&D)	1,802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R&D)	5,558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	3,159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R&D)	5,750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R&D)	4,250
		농식품기술개발(일반)	생물다양성위험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R&D)(농림부)	1,811
		식품기술개발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R&D)	5,63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20,981
		검역검사(R&D)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22,513
기타	국제 협력· 해외 농업	국제협력협상	농업협상대응	3,090
			국제기구분담금	1,537
			국제기구분담금(ODA)	16,216

사업 유형 (대)	사업 유형 (중)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9예산
기타	국제 협력· 해외 농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유자)	11,97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3,153
		농산물안전성관리	농산물안전성조사(ODA)	69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동식물검역검사(ODA)	230
		종자산업육성(농특)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87
	정보화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책임운영)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정보화)	1,231
		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6,161
		종자원정보화(정보화)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793
		농지관리정보화(정보화)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1,931
		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	행정정보화(정보화)	5,200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2,993
		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5,883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1,982
	행정 및 청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46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450
		행정지원	행정운영	217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협업 지원	1,155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563

발행일 2019. 04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프리비

전남 나주시 황동3길 17-29(빛가람동)

tel: 061-332-1492

fax: 061-332-1491

e-mail: pribe@pribe.co.kr

www.pribe.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면 법에 저촉됩니다.